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변화순 · 이미정 · 김혜영
황정미 · 이선형

KWADI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변 화 순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미 정 (본원 연구위원)

김 혜 영 (본원 연구위원)

황 정 미 (본원 연구위원)

이 선 형 (본원 위촉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우리사회에 결혼이민자 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이민자 가족이 부부폭력이나 결혼관계의 해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가족에서 언어와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통제,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 결혼에 대한 기대 격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부갈등 및 부부폭력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와 이들 여성이 당면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남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결혼의 지속 혹은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폭력을 감추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원만했던 부부관계가 문화적 차이, 모멸감을 주는 언사, 경제적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상승 및 확대됨으로써 더 큰 폭력이 유발됩니다. 그만큼 초기 갈등단계에서 상담의 개입이 중요한데,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 배우자, 배우자 가족들을 함께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쉽터와 지원센터간의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검토한 후, 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과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인 배우자의 과도한 폭력에 의한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 2008년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 2008년 7월 상담내용에서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각각 12.8%와 31.9%를 차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의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정책이 요구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문헌 연구와 자문회의

-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
- 결혼이민자여성 지원 관련 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설계 및 내용 보완

나. 심층면접

-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지원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함. 쉽터에 입소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는 8인의 결혼이민자여성과, 쉽터에 입소하지 않았으나 가족 갈등 혹은 폭력의 경험이 있는 4인의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해서 면접 실시.

- 폭력피해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담원의 도움이 필수적임.
-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 혹은 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각 지원체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의 어려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조사.

다. 전화설문조사

-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 지원체계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
-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 지원체계와 내국인여성 가정폭력지원체계와의 연계 조사.

3.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는 좁은 의미의 가정폭력을 넘어서는 다층적인 억압과 폭력의 양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따라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젠더 폭력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여성들은 여성인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약자 위치로 인해, 폭력 발생 맥락이 다르고, 이후 대처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이 새로운 억압과 고립을 만들어 냄.
- 이주 여성 가정폭력 관련 기존 조사결과(설동훈 외 2005)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적 행동, 모욕적인 말(언어폭력)이 30.5%, 물건 던짐(23.5%), 때리겠다고 위협(18.4%), 성행위 강요(13.8%), 세계 밀기(13.4%) 등의 순으로 경험함. 또한 생활비, 용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 통제, 외출 통제 등의 폭력이 나타남.
-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과정 자체가 권력의 위계화를 만들어내며 이후 여성들의 결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폭력상황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음.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인적·사회적 연계망을 가질 수 없는 외국여성

들은 한국 남성의 잦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높음.

나. 결혼이민자가족 갈등

-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당면하는 부부 및 가족갈등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임. 갈등은 결혼의 위기와 파국을 가져오기도 하며, 새로운 가족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나, 가족내·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국제결혼의 경우 쉽게 위기국면에 봉착 할 수 있음.
-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부부간 암묵적 합의와 동의의 근거자원이 내국인 부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쉽게 갈등이 누적되거나 잦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이주여성의 시대 및 친족과의 관계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임.
- 경제적인 요인: 국제결혼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이들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 결혼으로 인한 빚, 송금 문제 등이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함.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좌절로 인한 갈등.
-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 요인: 사교육비, 자녀양육비용, 보육담당자, 자녀언어습득문제, 자녀교육, 남편과의 자녀양육태도 불일치 등 다양한 하위차원의 문제들 내포하고 있음.
- 결혼을 둘러싼 기대격차: 한국 남성들은 급속한 문화변동을 통해 향유하기 어려운 가부장적 결혼관계를 국제결혼을 통해 획득하고 싶어하며,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경우 자국남성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한 단계 나은 배우자를 기대함.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부터 서로 다른 기대로 상대방을 이상화해 왔다는 점에서, 서로의 기대 차이를 수용하고 조율해가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쉽게 위기상황에 봉착함.
-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부갈등은 쉽사리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됨. 소통의 기술과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고조된 감정은 상호 비난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감정의 고조는 곧잘 폭력상황으로 이어짐.

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 폭력 피해 유형

-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갈등의 양상이 보다 심화되고 주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양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없고,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없기 때문에 가족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심층면접사례에 나타난 피해 유형
 - 심리적(정서적) 폭력: 아내에 대한 위협, 무관심과 방치, 멸시하고 억압하는 태도.
 - 성적폭력: 아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에 대해,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감정을 갖게 됨.
 - 신체적 폭력: 상습적인 구타.
 - 경제적 폭력, 재산상의 피해: 생활비, 용돈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 함.
- 이주자의 위치와 젠더 폭력
 - 문화적 편견: 외국인 아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의 모자람으로 돌림.
 - 불안정한 아내 위치: 전처 혹은 다른 여자친구와의 관계 지속하거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감행함.
 - 경제적 불안정 및 재산권 불인정: 외국인 며느리의 재산 상속 거부.
 - 공권력/제도적 차별: 가정폭력위기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 남편과 자녀 - 피해의 재생산: 남편의 상처, 자기 모멸감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태도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 체계

가. 피해자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빠르게 대응
-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여성 출국전 사전정보 제공사업, 배우자 사전교육, 한국어 교육, 취업역량강화 교육,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 법무부: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고충상담사업, 체류자격 유지 완화.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이주 여성쉼터 운영.

나. 내국인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과정

-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은 초기단계로 내국인 대상 가정폭력피해지원체계와의 비교 및 연계 필요.
- 전국 1366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확률이 높은 편이며, 내담자를 위한 지원과정은 가정폭력피해 내국인을 위한 지원과 그 내용이 유사.
- 내국인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언어) 문제’가 59.5%, ‘법률지원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9.5% 등이 보고됨.
-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의 보호시설 분리와 통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나왔음.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리를,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는 통합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음.

다.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 과정

- 접근성: 기존의 가정폭력피해 여성지원체계 1366, 경찰,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들을 통해 쉽기로 입소.
- 의료기관, 법률기관과의 연계 활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기관연계

- 쉽터는 가정폭력해결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중재의 역할까지 하고 있음.

5. 정책 제언

-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감내하는 인내와 노력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으로 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하는 탈사회화 과정(de-socialization process)이 요구.
- 사회문화적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 결혼이민자가정의 특수성상 가정방문상담원, 경찰, 혹은 출입국 담당 공무원 등의 관계자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 확산 필요.
 -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지지 체계 개발 필요.
 -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능력개발을 위해 지역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격려할 필요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 외국인 여성 전용 쉽터 확충 및 내국인을 위한 쉽터와의 연계 차원에서 확대 필요.
 -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서비스 제공 요구.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확대.

-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 모색.
-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 미등록여성이라 하더라도, 쉼터 거주 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 발급 필요.
- 생계비 지원 확대
 - 국적 취득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 쉼터 입소해도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 내국인 쉼터 평가 기준과는 다른 이주여성 쉼터 평가체계 마련 필요.
 -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피해와 치유는 내국인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나 치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즉 한글교육도 이들에게는 폭력피해치유 과정이 될 수 있음.
-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 결혼중개업체가 양방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자 신원 확인, 가정폭력 등 배우자 교육 활성화 시킬 필요 있음.
 -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위험과, 폭력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모든 정보는 여성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함.
- 체류자격 연장의 현실화
 -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든, 재결합으로 끝나든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체류자격 연장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문헌 연구	5
나. 전문가 자문회의	5
다. 심층면접	6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6
2) 피해자 지원체계 실무자 심층면접	9
라. 전화 설문 조사 : 내국인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11
3. 연구의 한계점	13
II.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5
1. 국제결혼의 현황과 특성	17
2.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1
3.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25
가. 가정폭력의 시각과 정의	25
나. 광의의 가정폭력 : 남편의 통제 및 폭력 경험 비율	29
다. 협의의 가정폭력 : 가정폭력 경험 및 신고	31
라.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34
III.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피해현황:	
심층면접 사례를 중심으로	37
1. 결혼이민자가족갈등 요인	39
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39

나. 경제적인 요인	43
다. 자녀양육과 연관된 갈등 요인	47
라. 결혼을 둘러싼 기대 격차	50
마. 기타 요인	52
바. 소결	53
2. 가정폭력 피해 사례 분석	54
가. 피해의 특성	54
나. 심층면접 사례에 나타난 피해 유형	56
1) 심리적(정서적) 폭력	56
2) 성적 폭력	57
3) 신체적 폭력	58
4) 경제적 폭력, 재산상의 피해	59
다. 이주자의 위치와 젠더 폭력	61
1) 문화적 편견	61
2) 불안정한 아내 위치	62
3) 경제적 불안정 및 재산권 불인정	64
4) 공권력/제도적 차별	64
라. 남편과 자녀 : 피해의 재생산?	65
마. 소결	66

IV.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69
1. 결혼이민자 여성이 처한 상황과 가정폭력의 위험	71
2.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74
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74
1) 결혼이민 여성 출국전 사전정보 제공사업	75
2) 배우자 사전교육	76
3) 한국어 교육	76
4) 취업역량 강화 교육	77

5)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77
나. 법무부 정책	81
1)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81
2) 고충상담사업	82
3) 체류자격 유지 완화	84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 정책	88
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88
나.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90
4.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과정	91
가. 내국인 지원기관의 결혼이민자 피해여성을 위한 역할	91
1) 내국인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92
2) 내국인 쉼터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95
3) 내국인 상담소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례	101
나.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 과정	104
5.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	109
가. 결혼이민자 여성 쉼터의 방향: 전용 vs 통합	109
나.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	110
다. 생계비 지원	111
라.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112

V. 요약 및 정책제언	115
1. 요약	117
2. 정책제언	119
가.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120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121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확대	121
2)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 모색	122

다.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123
라. 생계비 지원 확대	124
마.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124
바.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125
사. 체류자격 연장의 현실화	125
 ■ 참고문헌	127
 ■ 부록 1.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법	135
1. 국적법[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92호]	135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143
3.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6호]	149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152
 ■ 부록 2. 조사 질문지	156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질문지	156
2.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조사 질문지	162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내국인 보호시설 전화조사 질문지	166

표 목 차

[표 I-1]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심층면접 조사항목	8
[표 I-2]	면접참여자 특성	9
[표 I-3]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 지원 종사자 심층면접 조사항목 ...	10
[표 I-4]	결혼이민자여성 피해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대상자	11
[표 I-5]	전화조사 항목	12
[표 I-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및 조사대상	12
[표 I-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체 대비 조사응답 시설 분포	13
[표 II-1]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배우자의 국적별 증가 추이	19
[표 II-2]	국제결혼의 이혼자 수 추이	21
[표 II-3]	국제결혼부부의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	28
[표 II-4]	결혼이민자 여성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경험	30
[표 II-5]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	31
[표 II-6]	거주지역 및 아내 국적에 따른 가정폭력 경험	32
[표 II-7]	가정폭력 경찰 신고 경험	32
[표 II-8]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33
[표 II-9]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별 발생률	33
[표 II-10]	결혼지위 별 부부폭력 경험	35
[표 II-11]	남편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 유무 별 외국인 부인의 이혼고려 비율	35
[표 III-1]	유형별 폭력 발생과 폭력의 복합성	55
[표 IV-1]	결혼이민자대책 관련 부처간 업무분장	75
[표 IV-2]	법무부의 전국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현황	82
[표 IV-3]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체류자격별 고충상담 참여자 분포	83
[표 IV-4]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충 상담 내용	84
[표 IV-5]	재한외국인의 무료법률 상담 내용	84
[표 IV-6]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의 상담건수 (2006.11 - 2008.6)	89
[표 IV-7]	광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의 내외국인 이용자 현황 ...	91

[표 IV-8] 내국인 여성긴급전화『1366』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94
[표 IV-9]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결혼이민자 여성의 수1)	96
[표 IV-10]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입소 경로1)	97
[표 IV-11]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1)	99
[표 IV-12]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의 보호시설 분리와 통합 여부	101

그림 목 차

[그림 I -1] 심층면접 흐름	7
[그림 II-1] 국제결혼 증가 추이	19
[그림 IV-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기관연계	89
[그림 IV-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역별지원센터	90
[그림 IV-3] 여성긴급전화 『1366』의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 과정	93
[그림 IV-4]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호시설 거주기간	96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한계점	1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인 배우자의 과도한 폭력으로 실명, 골절,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피해여성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2001년 4.4%에서 2007년 10.5%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쌍에 1쌍이 국제결혼이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2000년 7,304건에서 2005년 31,180건으로 급증하였다. 동일한 시기에 결혼이주 여성이 크게 증가한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으로, 중국국적의 신부들의 경우 동기간 3,586명에서 20,635 명, 베트남 국적 신부들은 95명에서 5,822 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이주가족의 해체현상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 건수는 5,79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4.5%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관심 속에 08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 역시 “다문화 가족 포용”과 함께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어 다문화 가족의 포용과 더불어 이들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대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 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 내 만연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대책으로 결혼중개업자와 배우자 학대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소라미, 2008).

국제결혼, 그 가운데서도 2000년 이후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증가에는 중개업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의하면 이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 선택이 대등한 입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주로 남성에게 선택 권한이 주어지고 있으며, 중개업자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4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는 것이다. 신부의 연령이 훨씬 젊어 부부간 연령 차이는 20-30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 여성의 한국국적 취득은 정착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취득 시 남편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 내 이들 여성의 지위는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입지가 취약하다는 것과 이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에 여성부는 2006년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서 ‘이주여성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동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1577-1366은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파갈로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365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면접 상담과 가족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2007년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3,277건인데 상담자 출신국별로 베트남이 42.9%, 중국 25.6%를 구성하고 있다.

2008년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 2008년 7월 상담내용에서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각각 12.78%와 31.91%를 구성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결혼이주 여성은 대략 30%이고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는 23.1%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이처럼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폭력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의 실태 및 갈등의 요인은 내국인의 가족갈등의 요인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와 지역 및 계층의 차이, 국적 취득이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하지는 않다. 또한 가정폭력 역시 언어소통의 어려움, 배우자에 대한 기대차이로 인한 남편 뿐만 아니라 시댁식구의 학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관련한 기존자료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부부갈등 요인 및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문헌 연구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여성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 보고서와 연구 논문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자치정부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이 발간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방법과 틀을 구성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담당 공무원, 이주여성 지원 단체 및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차와 2차 자문회의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족갈등 상담과 폭력피해 지원 단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자문회의를 통해 전체 연구방향을 현장의 경험에 비추어 조율해 나갔으며, 조사 질문지와 항목들을 구체화시켰다.

6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구분	내용	참석자
1차 자문회의	결혼이민자 여성 전용 쉼터 관계자 자문회의 :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강성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김은 경(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경순(천안이주여성 상담소 모이세), 이맹열(인천이주여성상담소 울 랄라)
2차 자문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자문회의 :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강복정(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 원팀), 이미화 (울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장훈성(구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차 자문회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관련 관계자 자문회의 : 체류자격유지와 폭력피해 지원	김대환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성찬 (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소라미 (공 익변호사 그룹 공감), 최희중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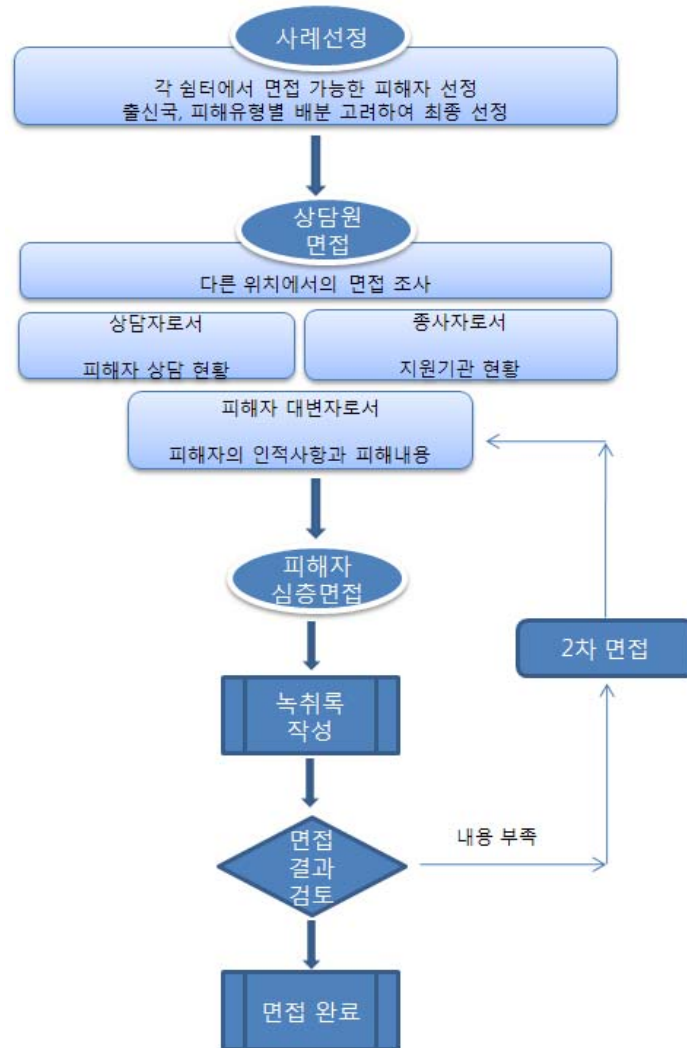
또한 연구 조사가 마무리 되고 1차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에, 세미나를 개최하여(2008년 12월 10일), 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심층면접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일반적 가정폭력 연구에 있어서 폭력피해자 접근이 어렵다. 그 이유는 여타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주 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성향 외에도 남편과 가족들의 저지, 그리고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한 면접의 방식을 택하였다. 전체적인 면접의 진행을 [그림 I-1]에 표시하였다. 가능한 한 출신국과 피해의 특징이 골고루 나타나도록 사례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쉼터와 상담소에 협조를 구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특성은 여성들의 출신국가별 특징뿐만 아니라, 각 개별 가구에 따라 그 피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다소 많더라도 사례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총 12 사례 중에서, 베트남 출신이 5명이지만, 이 중 2명은 폭력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입소하지 않은 사례로,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는 차별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면접 사례에 포함하였다.



[그림 I -1] 심층면접 흐름

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설문지 구성 및 조사 항목¹⁾

심층면접의 주요 조사 항목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심층면접이 이미 쉽터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진이 심층면접에 참여하기 전에 상담원과의 사전 면접을 통해,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숙지 한 후 면접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표 I-1]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심층면접 조사항목

항목	세부사항
사회 인구학적 특징	출생연도, 국적, 거주 지역, 자녀, 학력 등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한국 입국 혹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성장 환경	본국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남편의 성장환경에 대한 질문
결혼과 가족관계	본국과 한국의 가족생활의 차이,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임신과 출산,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생활	일 경험, 가족의 경제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폭력 인식,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의 어려움, 이혼 및 폭력 해결 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역사회 활동	지역 NGO 및 단체를 통한 활동,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

☐ 피해자 심층면접 참여자 특징

현재 쉽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쉽터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사례 I, J, K, L) 모두를 심층 면접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에서 이주자로서 갖는 취약한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에 포함시켰다. 면접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면접질문지는 부록 참조.

[표 I-2] 면접참여자 특성

번호	이름 (가명)	국적	쉼터 입소 여부	나이	결혼 (입국) 연도	내용
1	A	캄보디아	○	22	2006	성적인 폭력 심함.
2	B	필리핀	○	27	2005	남편과 사별 후 시댁 식구와 재산을 둘러싼 갈등. 국적 신청 중
3	C	조선족	○	43	2004	쉼터에 3번째 입소, 남편의 심한 알콜중독과 폭력으로 이혼 원함
4	D	베트남	○	26	2006	남편이 결혼 후 중개업체 운영하면서 잦은 외도와 폭력/ 이혼 원함
5	E	필리핀	○	23	2008	남편의 부모의존적 성격과 성적 폭력으로 갈등
6	F	필리핀	○	38	2003	쉼터에 세 번째 입소, 남편의 폭력 및 모욕적 언사로 갈등
7	G	베트남	○	28	2007	본인이 모르는 사이 이혼 당함, 이혼무효소송을 원함
8	H	베트남	○	27	2006	전처와의 관계로 인해 갈등/이혼 원함
9	I	베트남	×	26	2002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갈등/이혼과 양육문제 등으로 법적 갈등 있음
10	J	베트남	×	21	2006	이혼 후 생활의 대안이 없어 전남편과 다시 동거 중, 국적 미취득으로 불법체류자 신분.
11	K	몽골	×	36	2000	국적 취득, 물리적 폭력 보이지 않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12	L	조선족	×	39	2007	전처와의 문제로 남편과 갈등, 국적 신청 상태,

2) 피해자 지원체계 실무자 심층면접²⁾

결혼이민자 여성 전용 쉼터와 상담소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FGI와 직접 면접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실무자들은 일선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이들의 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실무 경험은 본 연구의 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심층면접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개별 피해자 상담 및 지원경험 역시 본 연구를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2) 심층면접질문지는 부록 참조.

10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상담은 한국인 상담원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출신국의 상담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층 면접 대상에 포함시켜, 결혼이민자 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 -3]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 지원 종사자 심층면접 조사항목

항목		세부사항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 현황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이 겪는 어려움,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내용의 변화,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 가정폭력의 원인
결혼이민자여성 폭력피해 지원 운영	접근성과 초기접촉	단체 접근 경로, 접촉 단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내용	폭력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 폭력피해여성지원 절차
	관련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의 협력 현황과 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관련 종사자 업무와 전문성 향상		지원 인력 현황,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도 및 개선방안		현재 결혼이민자여성 폭력피해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와 쉼터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과 의견

종사자 심층면접에 참여한 상담원들의 현황은 [표 I -4]에 정리하였다. 한 단체에서 2-3인의 상담원 심층면접을 진행한 이유는, 실제 폭력피해자 심층면접에 참여할 상담원들에 대한 면접이 각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 심층면접에 참여한 상담원 면접에서는 전체적인 상담경험뿐만 아니라, 개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질문하여,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지원체계의 어려움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 -4] 결혼이민자여성 피해지원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대상자

번호	소속	직급	면접 형태
1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	FGI
2	인천 이주여성상담소 울랄라	소장	FGI
3	천안 이주여성상담소 모이세	소장	FGI
4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FGI
5	울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FGI
6	구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FGI
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소장	FGI
8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직접 면접
9	인천 이주여성상담소 울랄라	상담원	직접 면접
10	천안 이주여성상담소 모이세	상담원(A)	직접 면접
11	천안 이주여성상담소 모이세	상담원(B)	직접 면접
1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원(몽골 출신)	직접 면접
1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원(중국 출신)	직접 면접
1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원(한국 출신)	직접 면접
15	(전직 상담 통역사)	상담 통역사(베트남 출신)	직접 면접

라. 전화 설문 조사 : 내국인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기존 내국인을 위한 피해자지원체계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향후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 내국인 지원체계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국인을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이들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³⁾ 여성긴급전화『1366』은 전국 16개 시도지역을 대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외국인보호시설을 제외한 총65개의 보호시설을 조사하였는데 전체의 64.6%에 해당하는 42개소가 응답하였다.

3)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 참조.

12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설문조사 항목

[표 I-5] 전화조사 항목

번호	항목
1	울 한해(2008. 1 ~ 2008. 11) 입소한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수
2	입소자들의 거주 기간
3	입소 경로(1366, 1577-1366, 상담소, 경찰, 기타)
4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시 애로사항
5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방향에 대한 의견

많은 쉽터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에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와 조사에 응답한 보호시설의 분포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및 조사대상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입소대상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피해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보호범위		6월 (1회 3월이내 연장가능, 최대 9월거주)	2년	2년	2년
현황 (’08)	설치	59개소	5개소	1개소	8개소
	지원	57개소	4개소	1개소	4개소
	미지원	2개소	1개소	-	4개소
조사대상		41개소	1개소	-	제외함

출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여성부(2008) 내부 문건 참조

[표 I-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체 대비 조사응답 시설 분포

(단위: 개소수)

	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5	13	3	2	2	3	1	1	9	5	3	5	4	3	2	7	2
조사 응답	42	6	2	1	1	1	0	1	6	5	2	4	4	2	1	4	2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12명의 결혼이민자 여성, 그리고 15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가급적 많은 여성을 접촉하고자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해 노출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결혼이민자여성의 특수한 위치로 인하여 면접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언어소통에 있어서 통역자가 사이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 가정폭력의 실태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II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 | |
|-------------------------|----|
| 1. 국제결혼의 현황과 특성 | 17 |
| 2.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21 |
| 3.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 25 |

1. 국제결혼의 현황과 특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의 재편으로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는 물론 자본과 사람까지도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08년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체류자는 891,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할 정도로⁴⁾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으며, 특히 이 가운데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2007년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은 총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지만, 정작 이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총 29,140건으로 국제결혼의 75.7%, 전체 국제결혼 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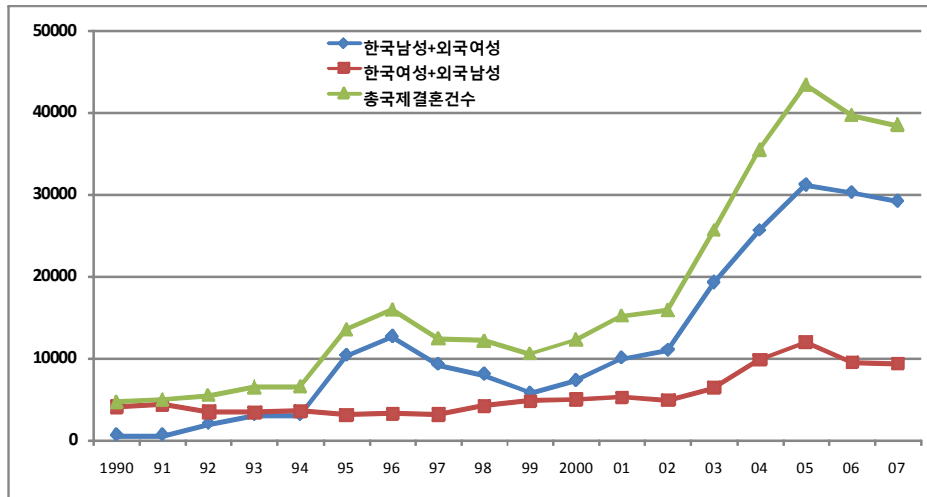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전혀 예측되지 못한 현상으로, 당시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90년 이후 이주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출신국가는 매우 다양해졌지만, 그러한 이주자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아시아 여성들이다. 한국사회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1980년대 말부터 특정 종교단체(통일교, 별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한국인 남성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을 적극 추진하면서 결혼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점차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성으로 결혼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 증가되었지만(한건수, 2006:201), 1992년까지만 해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 2,057명 가운데 일본 여성은 1,223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회적

4) 행정안전부가 2008년 7월 발표한 외국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891,341명으로 인구의 1.8%에 해당하는데, 이는 '07년 723천명 대비 23.3%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71.8%를 차지('07년 59.6%에 비해 증가)하며, 나머지 28.2%는 유학생, 기타외국인(상사주재원, 외교관 등)으로 분류된다(행정안전부, 2008.7).

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 한국의 농촌총각과 중국연변 조선족 처녀의 짝지어주기 운동으로 부터로 볼 수 있다. 조선족 여성들이 노동이주의 방편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한국인 남성들은 배우자 피부색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윤형숙, 2004). 한국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결혼은 언어와 문화, 혈연적 배경의 동질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 특히 이들의 결혼은 국제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내혼으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되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적기에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농촌총각들의 대안적 결혼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적극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여성단체와 농민단체는 물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적극 호응하였던 것이다(한건수, 2006).

그 결과 소수에 불과했던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여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는 더욱 높아져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국가 역시 매우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일 민족이라는 관념에 의해 쉽게 용인되어 온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 점차 위장결혼사례 등의 폐해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그 대안으로 피부색의 부담이 적은 베트남, 태국, 몽골 등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로 점차 국제결혼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부부의 동일 국적이나 민족적 동질성은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을 정도로 국제결혼의 비중이 증가하여 국제결혼 혼인통계 건수는 228,641건(통계청, 2007)이고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에 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7) 국제결혼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혼인 건수)

자료: 통계청(<http://www.kosis.nso.go.kr>)

[그림 Ⅱ-1] 국제결혼 증가 추이

[표 Ⅱ-1]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배우자의 국적별 증가 추이

(단위: 명)

여성배우자 국적별	2001	2003	2005	2006	2007(구성비)
중국	7,001	13,373	20,635	14,608	14,526(49.8)
베트남	134	1,403	5,822	10,131	6,611(22.7)
필리핀	510	944	997	1,157	1,531(5.3)
몽골	118	318	561	594	745(2.6)
캄보디아	-	19	157	394	1,804(6.2)
일본	976	1,242	1,255	1,484	1,665(5.7)
전체 외국 여성 배우자 수	10,006	19,214	31,180	30,208	29,140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결과」, 2008.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운 도시의 중하층 남성들과 농촌남성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농어촌 혼인의 27.7%가 국제결혼, 2006년에는 농어촌 남성 결혼의 41%가 국제결혼이 차지할 만큼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결혼 가운데 일부는 중개업소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방식은 만남과 결혼에 이르는 결정과정이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출발부터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결혼은 사설중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나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극히 짧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결혼이 성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를 통한 경우 대개 결혼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형식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의 이 같은 취약성은 실제로 이들 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혼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 약 45.4%로 증가하였지만, 2004년도에는 176.3%, 2005년도는 51.7%, 2006년에는 64.1%, 2007년 44.5%로 증가하고 있다(민현주 외, 2008: 65). 이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부부간 상호 이질적인 문화에서 기인하는 적응의 어려움과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결혼한 여성 29,140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8,364명이 초혼이고, 나머지 37%는 재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혼의 경우 초혼으로 인한 기존의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재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한다.

[표 II-2] 국제결혼의 이혼자 수 추이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내국인 총이혼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 총이혼	1,866 (1.3)	2,164 (1.3)	3,400 (2.4)	4,278 (3.3)	6,280 (5.0)	8,828 (7.1)
외국인 아내와 이혼	401 (0.3)	583 (0.3)	1,611 (1.2)	2,444 (1.9)	4,010 (3.2)	5,794 (4.7)
외국인 남편과 이혼	1,465 (1.0)	1,581 (0.9)	1,789 (1.3)	1,834 (1.4)	2,270 (1.8)	3,034 (2.4)

주: ()은 내국인 총 이혼건수에 대한 외국인 이혼건수의 비율(%)임
자료: 민현주 외(2008): 65에서 재인용

2.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한 실태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석원정, 2004; 박현정, 2004; 이윤애, 2004).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조사(김애령, 1998; 서영주, 2001; 민경자, 2003; 박현정, 2004; 이윤애, 2004)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05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전국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설동훈 외, 2005).

그러나 점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관점과 학문분야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주여성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출신국가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 및 가족생활적응과정 등을 살펴보는 연구들을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유진(1999)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이들을 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강해순(1999)은 양적 조사를 통해 조선족 여성들의 생활실태 파악하는가 하면, 홍기혜(2000)는 실태 조사와 면담을 병행하면서 국제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결혼생활체험과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신영화(2002)는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편의 가족치료상담 개입시 고려해야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현정(2000)은 한국취업을 선택한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의 차별과 멸시로 인해 자신들을 한국인과 동일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족들은 그들만의 민족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금해(2007)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적응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정민(2002)과 니이야 도시유키(2000), 이규삼(2000), 이현옥(2004), 인봉숙(2002) 등은 한·일 국제결혼에 국한하여 이들의 생활 적응의 갈등, 문제점 및 부부생활만족도를 연구한 바 있으며, 안현정(2003)과 윤형숙(2004)은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있다. 신경희·양성은(2006) 또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면서 점차 이들 여성이주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국제결혼을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작동되는 성별화된 이주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홍기혜, 2000; 이주영, 2004; 이해웅, 2005; 신란희, 2005; 임안나, 2005). 예를 들면, 김민정 등(2006)은 경제의 세계화가 가사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는 선진국 대도시 여성전문직 계급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출신의 여성 ‘서비스 계급(serving class)’을 양산한다는 사센(Sassen 2002a)의 주장을 빌어 이주여성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친밀성과 돌봄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중하층 남성이 아시아 아내를 맞이하는 현상을 성과, 계급, 국가 위계간 접점이 특유의 방식으로 구축되는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김민정 외, 2006:160-161). 즉 결혼을 통한

이주를 선택한 아시아 여성들은 가족 내 돌봄노동자로서 혹은 이들이 종사하는 사회적 노동 또한 성격상 ‘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노동자가 아니라 부인과 어머니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이주여성을 피해자, 희생자로 바라보는 시각과 이들이 주변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는 연구들로 구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실태와 적응과정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들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피해자로 대상화된 이주여성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김은실, 2003; 김정선, 2004; 이해경, 2005).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혹은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여성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한건수, 2006).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주체자로 결혼이민자들을 규정하고, 이들의 대응전략과 행위유형을 분석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윤형숙, 2004; 김민정 외, 2006; 최금해, 2007). 이들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따라 국경을 넘는 수동적인 이주자이기 보다는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주체적 행위자로서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들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서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해 국제결혼의 의미와 내용, 나아가 가족 및 친족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해가는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시집 식구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의 피해자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지만, 국제결혼을 선택한 모든 여성들을 피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과 배우자 남성 모두에게 억압적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윤형숙, 2004:3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기술하면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어려움, 특히 가족갈등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박정숙 등(2007)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서,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홍달아기·채옥희(2006) 역시 몇몇 사례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실태와 갈등을 분석하는가 하면, 한건수(2006)와 양순미(2006)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부 및 가족생활의 적응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윤형숙(2004)은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해경(2005)은 국내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을 통해 전반적인 혼인이주자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이들 혼인이주가정의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한 바 있으며, 김오남(2006)은 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가족갈등경험이 높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의 특성상 이들의 결혼경로, 문화적 차이, 국적취득의 어려움과 이에 더해 한국어를 위시하여 이들의 한국문화 부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은 이들의 부부 및 가족갈등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상황은 때로 이주여성에 대한 가족의 학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이주여성 학대에 관한 연구 또한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아내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광주여성발전센터, 2002; 광주여성의 전화, 2004; 위홈, 2003; 보건복지부, 2005; 전라남도, 2006)를 위시하여 국제결혼이주가족에서의 아내구타와 폭력에 대한 몇몇 연구 등이 이미 진행된 바 있다(신경희, 2005; 양선화, 2004; 김오남, 2006).

특히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표집방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를 조사한 설동훈 외(2005, 2006)와 정기선 외(2007)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조사 결과에 의한 결혼이민자들의 폭력피해비율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5) 2005년 전국 결혼이민자 조사(설동훈 외 2005)에서는 22.3%, 2006년 조사(설동훈 외 2006)에서는 9%가 각각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가 하면, 2007년 경기도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정기선 외 2007)에서는 가정폭력 경험률이 7.3%

이는 부부의 내밀한 경험이자 주관적인 태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폭력 피해의 사실을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매우 민감한 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이 남성 배우자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폭력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⁶⁾, 표본의 추출이나 조사 방법, 설문의 표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가. 가정폭력의 시각과 정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⁷⁾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개념을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배우자 학대(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의 용어가 혼

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표본의 크기와 표집 방법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즉, 2006년 과 2007년의 실태 조사는 모집단 명부(법무부의 귀화자 및 국민의 배우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시군이 보유한 결혼이민자 명단)에 근거한 계통표집으로 응답자를 추출하고 전문 조사회사의 면접원들이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비해, 2005년 조사는 명부에 기초한 계통표집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표집 하였으며, 센터의 활동가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조사원으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센터 활동가들의 경우는 응답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 용이하므로 응답자들이 가정폭력 경험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6) 그 예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보다 일본 여성이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본 여성들이 남성의 폭력에 대해 더 민감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7)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 2항).

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가정폭력, 아내구타와 같은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쓰여 지고 있다. 아내학대나 아내구타는 여권주의 시각에서 사용되며, 가정폭력 혹은 배우자 폭력은 일탈 및 범법 행위의 다른 유형으로 학대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사용된다(변화순 외, 2005).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본다면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으로 포괄되는 개념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고찰하고자 하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는 좁은 의미의 가정폭력을 넘어서는 다층적인 억압과 폭력의 양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심층면접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젠더 폭력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 역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정의되고 있다. 1993년 UN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발탁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행위’으로 정의된다.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행동강령을 선택하였는데 그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종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정희진 2003: 27).

- 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 ②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 ③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 ④ 무력 분쟁 하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침해
- ⑤ 임신 관련 폭력 (강제불임, 강제낙태, 피임의 강제적 사용, 여아낙태 등)
- ⑥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소수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여성 등)

결혼이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아내구타(wife battery)’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가 전형적인 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데 모든 폭력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여성인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다. 언어나 문화가 낮은 이주자라는 이유로 인해 사회적 지원망에서 고립되기 쉬우며, 위기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원가족 집단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즉,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에서도 이주자라는 위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다른 피해를 입게 되며, 폭력이 일어난 이후 대처하는 상황에서도 이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서 성적,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차원을 고찰하되 이주자라는 특수한 상황이 새로운 억압과 고립을 만들어 낸다는 점,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폭력의 층위들을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파이퍼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을 분석하면서 이주의 양쪽 연결고리(즉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여성들은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주자 여성이 일하게 되는 고용구조의 한 부분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경제와 고용시장이 성별에 따라 위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직되는 사회적 상황 자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Piper, N. 2003: 724~725).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석할 때에도 비슷한 시각을 도입할 수 있다. 즉, 결혼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송출국에서의 열악한 입장,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낮은 가족관계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 자체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의 구조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실태는 특정 행위가 일어나는 미시적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다 광범위한 삶의 조건들에 폭력적 상황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어떤 관계, 어떤 행위를 ‘폭력적’인 것으로 보는가의 인식이나 개념 자체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다문화 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인데,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모욕적 어투나 구타 위협 등은 폭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아내에 비해 남성들이 폭력에 대해 덜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인식이나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3] 국제결혼부부의 부부폭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항목	아내				남편			
	폭력	폭력 아님	모름	계(수)	폭력	폭력 아님	모름	계(수)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76.9	23.1	-	100.0(23)	67.0	28.4	4.6	100.9(27)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68.3	31.7	-	100.0(23)	89.1	10.9	-	100.9(27)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75.4	19.9	4.7	100.0(23)	88.4	8.9	2.7	100.9(27)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87.8	12.2	-	100.0(23)	95.5	4.5	-	100.9(27)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100.0	-	-	100.0(23)	93.4	6.6	-	100.9(27)
목을 조르는 행위	100.0	-	-	100.0(23)	93.4	6.6	-	100.9(2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100.0	-	-	100.0(23)	93.4	6.6	-	100.9(27)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00.0	-	-	100.0(23)	97.9	2.1	-	100.9(27)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47.4	35.2	17.4	100.0(23)	59.9	21.2	18.9	100.9(27)
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67.9	7.5	24.6	100.0(23)	65.4	22.9	11.7	100.9(27)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65.4	5.3	29.3	100.0(23)	60.1	28.2	11.7	100.9(27)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75.2	20.8	4.0	100.0(23)	65.4	25.9	8.7	100.9(27)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85.7	10.4	3.9	100.0(23)	81.5	34.5	4.0	100.9(27)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50.8	35.2	13.9	100.0(23)	61.5	34.5	4.0	100.9(27)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64.9	25.9	9.2	100.0(23)	69.3	17.7	13.0	100.9(27)

출처: 여성부, 2007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p.119.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문지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률이나 폭력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개략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조사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설동훈 외 2005, 설동훈 외 2006, 정기선 외 2007). 표집 방법이나 조사설문지의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조사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⁸⁾,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조사의 차이들에 유의하면서, 폭력 경험의 실태를 중심으로 기존연구 결과를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나. 광의의 가정폭력 : 남편의 통제 및 폭력 경험 비율

폭력적인 행동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남편의 폭력적 행동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조사한 2005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욕적인 말(언어폭력)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물건 던짐(23.5%), 때리겠다고 위협(18.4%), 성행위 강요(13.8%), 세계 밀기(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표 II-4).

국적별로 보면 중국 한족, 일본인, 태국 출신 아내들이 폭력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베트남 여성들은 경험률이 비교적 낮다. 이러한 응답 결과의 차이는 일부는 표본추출이나 조사방법 상의 문제로 인해, 그리고 응답

8) 한 예로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결과를 보면 2005년 전국 결혼이민자 조사(설동훈 외 2005)에서는 22.3%, 2006년 조사(설동훈 외 2006)에서는 9%가 각각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2007년 경기도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정기선 외 2007)에서는 가정폭력 경험률이 7.3%로 더욱 낮게 조사되었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본 표집 방법 및 조사원의 차이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즉, 2006년 및 2007년 조사는 모집단 명부(법무부의 귀화자 및 국민의 배우자 데이터베이스, 또는 시군이 보유한 결혼이민자 명단)에 근거한 계통표집으로 응답자를 추출하고 전문 조사회사의 면접원들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반해 2005년 조사는 명부에 기초한 계통표집과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응답자를 표집하였으며, 센터의 활동가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조사원으로 일부 참여하였음. 센터 활동가들은 응답자와의 래포(rapport) 형성이 용이하므로 응답자들이 가정폭력 경험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

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4] 결혼이민자 여성 출신국에 따른 부부폭력 경험

(단위: %, 명)

	전체 (703)	중국 동포 (449)	중국 한족 (164)	일본 (101)	필리핀 (78)	베트남 (66)	태국 (20)	몽골 (15)	구소련 (30)	기타 (25)
모욕적인 말	30.5	25.7	57.3	29.0	20.8	9.1	47.4	26.7	26.7	26.9
때리겠다고 위협	18.4	15.1	41.7	13.9	11.7	9.1	15.8	20.0	6.9	4.0
물건 던짐	23.5	19.2	34.8	34.7	14.3	4.5	30.0	20.0	26.7	34.6
세게 밀기	13.4	11.6	25.8	8.0	13.0	1.5	21.1	13.3	17.2	8.0
손발로 구타	13.1	12.1	21.5	14.0	6.5	6.1	10.5	13.3	13.8	12.0
성행위 강요	13.8	12.3	31.3	11.0	9.1	4.5	5.3	.0	3.4	4.0
변태적 성행위 강요	9.3	6.9	28.0	2.0	7.7	1.5	.0	.0	3.3	4.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설동훈 외(2005), 124쪽 표4-22.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아내를 통제하려는 남편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언어폭력, 신체폭력과 더불어 남편의 통제를 항목에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들에 따르면,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음’, ‘송금 통제’, ‘외출통제’, ‘의처증’ 등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5).

아내의 국적에 따라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경우 ‘생활비, 용돈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남편의 경제적인 통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동등한 아내이자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생활고 또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정기선 외 2007) 남편으로부터의 통제 및 폭력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폭언, 모욕적 언어사용’(5.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생활비 또는 용돈 주지 않음’(3.6%), ‘외출통제(3.0%)’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과 더불어 경제적인 유거나 과도한 일상생활의 통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표 II-5]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

여성결혼이민자 조사		폭언 모욕적말	생활비 용돈주지 않음	송금 못하게 함	신체적 폭력	의처증	기타	전혀 경험없다
전체	(829)	6.2	5.3	2.8	2.3	2.2	4.1	82.5
거주지별	도시	(629)	6.7	5.7	3.2	2.7	2.1	81.4
	농촌	(200)	4.5	4.0	1.5	1.0	2.5	86.0
출신국별	조선족	(367)	5.7	5.7	2.5	2.7	2.2	83.1
	한족	(87)	2.3	1.1	3.4	2.3	4.6	83.9
	베트남	(143)	0.7	7.7	6.3	0.0	2.1	83.2
	일본	(99)	17.2	5.1	0.0	1.0	0.0	80.8
	필리핀	(73)	5.5	6.8	1.4	5.5	4.1	76.7
	기타	(60)	10.0	1.7	1.7	3.3	3.3	85.0

* 출처: 설동훈 외 2006, 106쪽 표 3-19.

다. 혐의의 가정폭력 : 가정폭력 경험 및 신고

여기에서는 혐의의 가정폭력, 즉 보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문항 중 유형별 가정폭력 경험과 신고 경험을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다. 2005년 전국 결혼이민자 조사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7.7%,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22.3%로 나타났다. 거주지 및 출신지역별로 폭력 발생률을 보면 농촌 거주 중국동포의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로 나타났다. 폭력 발생을 신고한 비율은 농촌 거주 중국동포와(21.9%) 도시 거주 중국동포(10.9%)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중국이외의 지역 출신 여성들은 신고하였다는 비율이 낮았다.

[표 II-6] 거주지역 및 아내 국적에 따른 가정폭력 경험

(단위: %, 명)

	전체 (703)	도시 중국동포	도시 기타외국	농촌 중국동포	농촌 기타외국
가정폭력 경험 없음	77.7	74.5	80.8	67.2	82.2
신고한 적 있음	8.0	10.9	4.8	21.9	2.3
폭력발생, 신고 안함	14.4	14.6	14.4	10.9	15.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동훈외. 2005. <표4-25>

한편 1년 뒤에 실시한 2006년 조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9.1%) 및 신고경험(2.3%)이 모두 더 낮아졌다(표 II-7).⁹⁾

성별·거주지별로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집단에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출신국별로는 한족 여성(5.3%)과 필리핀 여성(3.6%)의 신고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폭력을 당했으나 신고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필리핀 여성(17.9%)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베트남 여성(7.2%), 조선족 여성(6.4%)이다.

[표 II-7] 가정폭력 경찰 신고 경험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당한 적 없음	신고한 적 있음	가정폭력을 당했으나 신고한 적 없음
전체	(922)	90.9	2.3	6.8
거주지별	도시	(702) 90.6	2.4	7.0
	농촌	(220) 91.8	1.8	6.4
출신국별	조선족	(435) 91.5	2.1	6.4
	한족	(94) 90.4	5.3	4.3
	베트남	(152) 91.4	1.3	7.2
	일본	(96) 97.9	0.0	2.1
	필리핀	(84) 78.6	3.6	17.9
	기타	(61) 91.8	3.3	4.9

자료: 설동훈외. 2006. <표3-21> 재정리

9) 주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표본추출과 조사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05년 조사에서는 일부 응답자를 이주자 지원센터를 통해 표집하였고 센터 활동가들이 조사원으로 일부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 조사회사 면접원이 조사를 담당한 2006년 조사보다 폭력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¹⁰⁾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47.7%로 한국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발생률은 남편폭력발생률(17.8%)보다 현저히 높은 38.8%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폭력유형별로도 동일하였다. 다문화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아내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부간의 상호폭력발생률은 8.9%로 나타났다.

[표 II-8]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단위: %, 명)

구 분	전체 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부부폭력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38)
남성의 아내폭력	38.8	31.9	5.3	10.4	10.4	12.2	15.5	14.4	(23)
여성의 남편폭력	17.8	12.6	-	9.7	9.7	-	5.2	4.5	(27)
상호폭력	8.9	8.9	-	3.2	3.2	-	-	3.2	(38)

주: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짊 움켜잡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함.

[표 II-9]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별 발생률

(단위: %, 명)

폭력행위	최근 발생률	
	아내	남편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31.9	12.6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17.6	4.5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4.5	-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5.3	-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5.3	-

10) 2007 가정폭력실태조사에 포함된 다문화가족응답자는 아내 23명, 남편 27명, 합 50명이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7명, 일본 6명, 호주 1명, 무응답 3명 등 모두 39건이었다. 이 조사는 응답자 수가 적어 전체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수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폭력행위	최근 발생률	
	아내	남편
목을 조르는 행위	-	-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0.4	9.7
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5.3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5.3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12.2	-
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5.3	-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5.3	-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5.5	5.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9.3	-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0.4	4.5

폭력의 유형별로 최근 발생경험을 살펴보면 아내 폭력의 경우 모욕적인 말(31.9%), 때리려고 위협(17.6%), 무관심과 냉담(15.5%), 배우자의 물건파손(14.5%) 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응답하였다.

라.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이주여성의 가정 폭력경험은 결혼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거나 이혼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폭력경험율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2005년 조사결과, ‘손발로 구타’를 당했다는 응답은 기혼여성의 경우 8.1%에 불과하였으나, 별거중인 여성은 48.7%, 이혼한 여성은 57.9%로 매우 높았다. ‘성행위 강요’는 기혼여성이 6.9%, 별거 63.2%, 이혼 47.4%로 별거와 이혼 집단의 폭력 경험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가정폭력이 다문화 가족의 가족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가족해체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10] 결혼지위 별 부부폭력 경험

(단위: %, 명)

결혼이민자 조사	모욕적 말	때리겠다고 위협	물건 던짐	세계 밀기	손발로 구타	성행위 강요	변태적 성행위 강요
전체 (921)	31.0	18.4	23.7	13.9	13.5	14.0	9.5
기혼 (755)	24.1	11.1	19.5	7.6	8.1	6.9	3.4
별거 (76)	84.2	74.7	60.5	57.6	48.7	63.2	47.4
이혼 (38)	68.4	50.0	52.6	52.6	57.9	47.4	42.1

자료: 설동훈외, 2005. <표4-20> 재구성.

2007년 경기도 결혼이민자 조사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혼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9%인 반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의 응답은 5.3%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II-11] 남편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 유무 별 외국인 부인의 이혼고려 비율

(단위: %, 명)

이혼고려 \ 폭력피해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전체	차이검증
없음	56.1	94.7	92.7	$\chi^2=85.75$ $p<.001$
있음	43.9	5.3	7.3	
합계	100.0	100.0	100.0	
사례 수	41	769	810	

자료: 정기선 외 (2007), 159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고 열악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주의 과정 자체에서 아내와 남편,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이후 정착과정에서 폭력에 처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경우 이주여성들이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몽골과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이주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연구(김현미 외 2007)에 따르면,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고립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체류 자격 및 권리 제한에 있어 남

편의 일방적 권한 행사, 남편과 가족의 학대와 폭력, 문화적 박탈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 이주한 경우,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한국인 중개업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른바 ‘사후관리’ 차원에서 개입하는데, 사실상 사후관리의 주된 목적은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윤보전을 위해 여성들의 이탈을 막고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과정 자체가 권력의 위계화를 만들어내며 이후 여성들의 결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폭력생활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가정폭력은 다문화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인적 사회적 연계망을 가질 수 없는 외국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잦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김현미 외 2007: 139).

III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피해현황: 심층면접 사례를 중심으로

- | | |
|------------------|----|
| 1. 결혼이민자가족갈등 요인 | 39 |
| 2. 가정폭력 피해 사례 분석 | 54 |

1. 결혼이민자가족갈등 요인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부부 및 가족갈등은 결혼당사자인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들의 개인적인 특질에서부터 이들이 처한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차원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국제 결혼한 이들 또한 한국의 여느 부부들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갈등요인에 의해 결혼의 위기와 파국을 경험하는가 하면, 갈등극복을 통해 더욱 응집된 부부 및 가족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의 갈등요인이 반드시 부부 및 가족관계의 파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내국인끼리의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호 소통과 이해의 자원이 부족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족내·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위기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자신들의 결혼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요인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부부·가족 갈등요인보다는 결혼이민자가족의 고유한 갈등유발요인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의 성격 차이(33.4%)와, 생활방식의 차이(22%)에 기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그러나 부부간 성격차이는 대다수 한국의 부부갈등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분석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응답의 비중이 높은 ‘생활방식의 차이’는 내국인 부부갈등요인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 가족갈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부부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간 암묵적 합의와 동의의 근거자원이 내국인 부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응한 결혼이민자여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40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 응. 사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라서 좀 달라, 생각도 다르고. 돈에 대해서 돈 가치 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또 생각이 달라, 의식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남편도 다르잖아요--- (중략).---한국 남자는 여자는 꼭 집에 있어야 된다. 일 하면 안 된다. 남자한테는 다 해야 되고,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된 다. 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다 남편하고 같이 먹고, 밥을 남편한테 차려주고. 또 퇴근하기 전에 나와서 인사도 해야 되고, 남편 옷 같은 거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생활이... ”(몽골에서 온 K씨, 1999년 입국)

“-- 네.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남자들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응당 여자가 해야되는데, 응당 니가 할 켜데 왜 하지도 않고... 남자가 기다리다가 여자는 또... 그런 모순에서 또 갈등이 나서. 상담 받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 중략-- -- 밥도 잘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남자라는 게 그것 뭇 차고 저렇게 여자를 ** 이러는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한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 전 남편이 한족이거든요, 같은 교포 아니고. 그래 보면 뭐 해달라 그러면 그냥 또 해주고. 근데 나는 또 조선족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다~ 해서, 그릇 씻고 집 청소하고 이런거 다 어머니가 하는 모습 봤으니까 나는 또 거기에 적응이 된거예요. 그니깐 내가 지금 이렇게 와도 응당... ” (중국에서 온 L씨, 2006년 입국)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적응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시댁식구들과 남편들은 결혼이민자만큼 스스로의 적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은 물론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특질과 배경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들 배우자의 고유한 생활습관 등을 배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부부들은 대화 시 주로 한국어를 사용(92.8%)하고, 영어(7.5%)와 본국어(6.9%)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부도 2.7%로 나타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5), 이는 곧 이들 가족이 한국남성 일방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언어장벽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속마음을 쉽게 표출하기 어려움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 역시 아내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내국인 부부에 비해 대화의 부족은 물

론 상호 소통과 이해의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쉽게 갈등의 누적이나 잦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주여성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늘 어린아이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잘사는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모든 기준이 ‘한국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을 뿐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 결혼관계의 불평등성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인경, 2007). 이에 비해 한국남성이나 가족들은 비록 처음에는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어눌함이나 한국문화에 서툰 행위를 수용하는 듯하나,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남편들은 쉽게 아내에게 좌절을 느끼면서 아내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과묵함이 남성의 미덕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익숙한 한국남성들은 말을 안 해도 결혼이민자인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만 정작 언어적 표현조차 원활하지 않은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렵다. 소위 ‘고맥락문화’에 익숙한 한국남편들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이나 태도를 함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설명할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남성문화에 의해 이러한 갈등상황에서조차 남성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행위수정이 쉽사리 촉발되지 못하고 있다(유명기, 1997:128; 윤형숙, 2004:320에서 재인용).

“-- 차이가 나죠. 중국에는 남녀가 평등해요. 둘 다 똑같이 회사에 근무하니까 누가 일찍 들어오면, 하는 거죠.¹¹⁾ 그런데 한국에는 그래도 남편이 일찍 들어와도 여자가 들어와서 다 해다 주고 바치고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거 적응할라고 엄청 노력해요. 남편은 또 자기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혼자 김치 담글 때가 있어요. 김치 잘해요. (면접자: 남편이 김치 담가요?) 네. 왜냐면 입에 안 맞고, 시장에서도 입에 안 맞다고, 반찬 같은 거 사와도 자기 입에 안 맞다고, 자기 입에 맞게 다시 해요. 그래니까니 내가 하는 게 항상 만족이 안 돼요. --불평한다기 보다, 먹을 때 만큼은 안 그래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는데, -- 술이 넘어가면 ‘아니다’라고...” (중국에서 온 C씨, 2002

11) 누가 일찍 들어오든 일찍 들어온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거죠.

년 일로 입국 2004년 결혼으로 2차 입국)

“(통역자)--- 자기는 맨 처음에 남편한테, 야박한 것 하잖아요. ‘너는 이것 밖에 안돼’. 막 무시하고, 그건 거는 힘들었는데.. 계속 하니까, 자기는 익숙하고, 이거는 [내가] 잘 못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니까, 그런데 엄마로서 자기 애기한테 좋은 말 쓰고 싶고, 좋은 것 가르쳐주고 싶은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필리핀에서 온 F씨, 2003년 입국)

실제로 몇몇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부부의 의사소통의 장애와 어려움이 이들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자 갈등양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감의 교류가 어려워짐으로써 부부 갈등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부부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유진, 1999; 윤형숙, 2004; 설동훈 외, 2005). 이에 더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이주여성의 시대 및 친족과의 관계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편의 친족망에 편입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친척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부모와의 갈등이 이주여성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일차적으로 이러한 갈등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며느리와 외국문화를 접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문화적 갈등에 기인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홍기혜, 2000).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데(보건복지부, 2005), 상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없는 상황은 이들의 갈등상황을 악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해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불신하게 되고, 때로 이러한 불신은 아들부부에 대한 일상적 간섭이나 가정 경제권 장악,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순종 요구, 남존여비적인 태도로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들 가족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윤형숙, 2004). 더욱이 국제결혼가족의 구성은 한국의 일반 가족에 비해 시대식구와의 동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부갈등은 곧 결혼이민자 부부관계는 물론 나아가 이들 가족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보건복지부, 2005).

“--처음에는 저를 잡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 부려 시켜먹고. 처음에는 [남편보고] 조심해라, 여자 돈 챙겨서 도망간다, 막 그랬는데, 인제 왔으니까, 자기 옛날에 못 했는 말이 다 했는데,¹²⁾ 지금이가 조금, 그런 말들 때문에, 생각 들겠 죠.--” (베트남의 이주여성으로 상담원으로 활동, 1996년 입국)

“(통역자) 저기 자기 시아버지한테 맞은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지금 잘 때도 계속 나타나요. 꿈에서. 어떨 때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같이 있는 베트남 여자가 안 깨우면, 아마 침대에서 떨어지고 죽을 정도 막, 악몽 같은, 맨날 생각났어요. ---” (필리핀에서 온 E씨, 2008년 입국) .

“상담자 :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거 이전에 좀 더 언어가 소통이 됐다면 오해가 덜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안다면, 한국 사람이 안 다든가,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 한국문화를 안 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주지하듯,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여성에게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수용하면서 적응해야할 문제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혼이민자 여성들 역시 한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었고, 기대했던 생활 역시 도시중산층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결혼하고 있어 이들이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남편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익숙한 방식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민자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결혼이민자 당사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개인의 성격문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호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개인의 성격, 국민성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특정 국가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나. 경제적인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은 저소득층이거나 중간층이면서 신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혹은 국내에서는 적합한 재혼의 상대를 만날 수 없는

12) 옛날에는 못 할 말 없이 다 했는데

계층의 남성들이 선택하는 대안적인 결혼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결혼 후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결혼이민자가족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특히 한국의 외형적 경제변화에 기대를 걸고 결혼을 결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심한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련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들 가족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예컨대 2005년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이며(보건복지부, 2005), 전남과 광주 인근지역의 국제결혼가족 조사결과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8.9%로, 15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모두 합하면 전체 다문화 가족의 80%가 차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오남, 2006). 따라서 이들은 이질적인 문화와 민족의 차이에 더해 경제적 취약성은 이들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김오남(2006)의 연구결과 역시 이주여성들은 ‘공동생활영역’,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부부갈등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때로 이민자여성의 배우자들은 일정한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거나 그들이 결혼조건으로 이주자 여성의 친정식구나 결혼 전 자식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기로 약속한 비율도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부부 및 가족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존의 논의에서 부부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에 돈을 보내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아시아 국가여성들이 가난한 친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음에 기인한다(홍달아기 외, 2006).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들이 결혼을 통해 본국에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또 자기가 낳은 애들 때문에 데려오고 싶어하고, 또 돈 보내주고 싶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폭력이 또 나오고, 주로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 돈 문제. 남편은 같이 일하고 돈 벌었으니까 그거를 ** 싫어하니까. 여자는 또 도와주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 그니깐 큰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같아요. ---”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몽골 여성이주여성)

“-- 그니까 첫째는 목을 많이 졸라요, 우리 남편이. 그게 겁나드라고요 특히, 때리는 것보다 이게. 목을 조르면 진짜, 또 술을 안 마신 상태면 또 정신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술 마시고 어느 순간 사람 딱 목 조르면 죽이는 게 드물잖아요(?). 참지 못해서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과정에 일일이 신고한 적도 몇 번이거든요. 경찰이 왔다 간 적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있어요. --- 중략 --그렇죠 살아야죠. 근데 왜 살고 싶으면 아까 나이 얘기도 했지만 우선 경제 문제가 첫째잖아요. 근데 나로 말할 때 집도 있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크게 요구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중국에 애 생활비 딱딱 보내주고 하니까. 그걸로도 나는 만족 느끼니까 그냥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온 L씨, 2006년 입국).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이 모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사실에 있으며, 이러한 환상은 짧은 결혼과정 동안 자신이 준비해간 목돈을 평평 쓰기도 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고 처가에 얼마의 돈을 주기도 하는 한국남성의 행동을 통해 실제 믿음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모아두었던 목돈을 과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적잖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의 높은 물가와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직면하여 한국의 경제적 풍요로움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생활에 심한 좌절이나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남성들은 결혼 직후부터 경제적인 무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에 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도 하기 전에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거나 역으로 남편을 부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맞아요. 나는 이혼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여기 한국 와서, 저 남편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친구 되게 많아요. ---- 그냥 친구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연애도 안 했는데, 남편 만나고, 결혼하니깐 너무 억울하지. 게다가 여기 와서 남편 사업 잘못 돼서, 빚 갚고, 나는 쓰는 대로도 못 쓰고, 안산이 이사 가면은 3년 내내, 거울에 춤잖아요. 난방도 안 틀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애는 춤고. 옷 맨날 입혀 재우고. 집에서 이불 깔아서 이불 위에서 놓고 그랬는데, 갖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해주고, 집에서 돈 부쳐준 적도 없는데, 겨우 빚 다 갚을라고 하는데, 술 먹고, 하트 안 좋은 면을 많이 하니까.---- -, 남편 지금 빚 많이 저서, 생활비 많이 못 줘요. 한 달에 20만원 밖에 못 줘요. 그럼 20만원 갖고 뭘 하겠어요?”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으로 현재 상담원으로 활동, 1996년 입국)

“(통역자)--- 맨 처음에 한달 첫달 월급 받았어요. 60만원. 자기 20만원 줬대요. 남편한테. 우리 전기세 같은거나 내라. 그런데 그것도. (따갈로그어로 통역자 확인) 그런데 그거는 전기세 세금 같은 거 안내고, 자기 용돈으로 하루 밥 세끼 식당에서 먹어요. 한 달을 그렇게 했대요 --”(필리핀에서 온 F씨, 2003년 입국)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친정 송금을 둘러싼 갈등 역시 적지 않은데, 한국남편들은 송금문제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편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어 부부간의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더욱이 얼마씩 본국으로 송금해준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음으로써 점차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국남성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한 부부갈등이나 시댁과의 갈등 또한 적지 않다(이인경, 2007).

“--- 왜냐면 본인이 집에서 가난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솔직히 말도 안 통하고, 바로 얘기 생기며는 집에 도와 줄 수 없으니까, 본인은 한국 돌아올 때 피임약 갖고 왔어요. 한 달 지나고 시어머님이 알고 난리 쳤어요. 난리 쳤고, 결혼정보업체 통역 사람 불러서 본인한테 여기 한국 살고 싶으나, 살고 싶으면 얘기 낱아야 되고, 안 살고 싶으면, 너는 가도 된다고. 그 피임약 먹는 거 때문에. 솔직히 본인 애 낱길 원하지 않았는데, **도 안 되고, 집에도 보태줘야 되는데---”(베트남에서 I 씨, 2002년 입국)

“--- 1년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루에 3~4만원의 일당이기엔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것을 남편이 전부 가져갔는데 거기서 본인은 한 달에 3~4만원 정도 받았대(통역). 한 달이 아니고 가끔이에요. 가끔 줘서 집안 생활하고, 줘서 한번은 200만원쯤 주고 베트남 보내주고 한번은 50만원 줬어요. 두 번. --(통역) 그것도 본인 돈으로요...(통역중) 화났을 때 여기 어떤 사람이 친정에 그렇게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냐. 베트남에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 주는 사람은 자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으면 자기를 줘야한다고 해요. ---”(베트남에서 온 H씨, 2006년 입국)

한편, 이해경의 연구에 따르면, 혼인이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되어 입국 후 5년간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이해경, 2005). 더욱이

한국 남편은 자신들의 생활기반이 약하고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아내의 가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와 연관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라남도 여성정책과, 2004). 이해경은 이를 사적 부부관계의 계급화로 인한 귀결로 이해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결혼이민자가 죽은 단순한 국가간 결합이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배우자들의 가부장적 성향은 오히려 강화되어 부부관계가 준계급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계층끼리의 혼인이나 상류 계층출신의 아내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계층이 낮거나 비록 자신의 계급적 지위가 낮다할지라도 자신보다 못한 국가출신의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국가의 경제적인 차이를 계급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이해경, 2005).

다. 자녀양육과 연관된 갈등 요인

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녀양육문제는 매우 다양한 갈등의 하위차원들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둘러싼 갈등에는 사교육비와 자녀양육비용문제, 보육담당자, 자녀언어습득문제, 자녀교육, 남편과의 자녀양육태도 불일치 등 다양한 요인들로 재분류될 수 있다(광주여성의전화, 2004; 신경의, 2004; 보건복지부, 2005).

이주여성과 자녀관계를 연구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4.3%가 자녀와 집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0-70% 정도로 나타나 한국의 부모들과의 차별적인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 재혼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주자 여성들은 전처소생의 자녀와는 거의 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9%나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부부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한 사례 역시 남편이 전처 소생자식과의 동거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으며, 결혼 후 동거한 딸의 문제로 갈등이 증

폭되어 이혼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37%가 재혼이라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내국인 부부에 비해 전처와 전처소생 자녀들과의 갈등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아, 첫 번째 이유는 이혼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전부인하고... 아들만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따로 살고 본인하고 남편하고 아들과 같이 사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한국에 오니) 딸이 있더라... 중략---- 자식한테 통화가 안 되도 여기 본인에게 일어나라고 묻고, 막 왜 통화안하냐고. (상담원 통역): 명절 고 무렵에 딸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가족과 이야기를 했었고, ---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데려 오느냐 데려오면 안 된다 했었고, 그 다음날 남편이 딸과 통화를 하였고, OO(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 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H씨, 2006년 입국)

다른 한편, 자녀양육문제로 고부간 갈등 끝에 이혼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자녀를 놀이방에 보내는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주여성인 친정을 돕기 위해 바깥일 하는 것에 대한 시부모의 불만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자녀양육의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가족갈등이다.

“--- 그 때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애는 놀이방 보내고, 본인 찾아가서 애 데려가더니, 시어머니도 마침내 왔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애 시어머니가 데려 가겠다, 본인은 안 되고. 그 때 놀이방 선생님이 두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 때는 서로 애 갖겠다고, 데려 가겠다고 해서, 본인 어땠는지 몰랐는데, 지금이 와서 시어머니는 학원 선생님이 증인 나온다고, 본인은 시어머니가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 (통역자: 하튼 본인은 기억 안 나는데,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싸우는지 기억 못 했어요). --- 중략 (통역자 본인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그 때 애 놀이방 보내고, 한 달에 50만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비싸다고 생각 드는지) -- 아, 삼십 몇 만원, 든다고 해서, 비싸다고.---” (베트남에서 I씨, 2002년 한국입국)

다음은 자녀출산에 대한 시댁의 간섭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꼽을 수 있다. 아직은 젊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자녀출산을 미루는 며느리에게 시

어머니가 자녀출산을 강요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역시 친정을 돕기 위해 구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지만, 점차 이러한 갈등은 자녀출산 후까지 이어져 결국은 자녀양육을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 (통역자)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서 가난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솔직히 말도 안 통하고, 바로 애기 생기면은 집에 도와 줄 수 없으니까, 본인은 한국 돌아올 때 피임약 갖고 왔어요. 한 달 지나고 시어머님이 알고 난리 쳤어요. 난리 쳤고, 결혼정보업체 통역 사람 불러서 본인한테 여기 한국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 애기 낳아야 되고, 안 살고 싶으면, 너는 가도 된다고.----- 6개월 후에 임신 되고, 애기 낳는다구.¹³⁾ 애기 낳고 나서 후에는 본인 취직 됐는데, 애 놀이방 보내고, 집에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비싼 유치원비니까, 속상한거야. 못 보내고, 본인도 화 나서, 집에서 애 보겠다고, 놀이방 안 다닌다고.” (베트남에서 온 I씨, 2002년 입국)

이 밖에 결혼이주자가족의 경우 자녀의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이들의 자녀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갈등 또한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누적되지 않아 정확한 갈등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성별분업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한국가족에서 어머니의 자아정체성은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은 자녀들에게 일정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이 밖에도 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 정치 등 사회현상에 정통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에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차별경험이 자녀에게로 이어질까 하는 조바심을 갖게 되며(최금혜, 2005),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언어장애나 말더듬과 같은 언어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자녀와의 언어소통 문제로부터 어머니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서투른 한국말로 인해 자녀로부터 받는 무시나 가족의 소외 역시 이들 가족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

13) 낳았다구

할 수 있다(홍달아기·채옥희, 2006). 이에 대해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다음과 같은 속내를 하소연하고 있다.

“(통역자)--- 자기는 한국말 부족해도 필리핀 말 안 가르쳐줬대요. 왜냐하면 진영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거니까 한국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말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한국 말 못하니까 가르쳐 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제일 마음이 힘든 거 같아요.

상담원: 또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녀가지고 말을 잘 해요. 엄마보다 훨씬 잘 하죠.” (필리핀에서 온 F씨, 2002년 2003년 입국)

라. 결혼을 둘러싼 기대 격차

대부분의 결혼 이면에는 남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결혼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과정 부터 남녀의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한국 남성들은 급속한 문화변동을 통해 점차 향유하기 어려운 가부장적 결혼 관계를 국제결혼을 통해 획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계층적 지위가 미약한 남성일수록 권리의식이 강한 한국여성으로부터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출신국의 여성을 기꺼이 배우자로 선택하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3세계의 여성들은 자국에서의 좌절과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거나 남녀차별적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고픈 희망으로 본국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은 국가 남성들과의 결합을 회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본국남성들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한 단계 더 나은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녀의 기대격차는 때로 이들 결혼 및 부부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혜경, 2005).

“---(통역자) marriage agency에서 남편이 그 office manager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 안 계시고,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만약 결혼하면 셋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것도 집은, 큰 집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집. 그런데 와서 일 없잖아요. (상담자: 남

편 일 없구요.) 네. 농사하는 거. 농사하는, 농사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시아버지 farm 있어’ 이렇게 얘기 안하고, 만약에 아버지 farm있으면 농사하는 거 그런 거 얘기 없고, 그냥 남편이 시에서 office work 같은 거 하고, 그런데 왔으니까(와보니까) countryside 살아요, 시골? 시골 집에서 살고. 시골집이야. 자기는 큰 집이든 시골집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집이니까. 근데 일 없는 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거. --- (통역자) 그러니까 자기는 논에서 일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기는 집안일만 하고, 집안일 같은 거는 상관없어. 왜냐면 필리핀에서 살면 자기 집안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필리핀에서 하는 일 하면 똑같으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상 논에서 일 하는 거, 집안일도 하고 되게 피곤하고, 만약에 남편한테,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나,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하면 남편이 막 화가 났대요. 화를 내고, ‘너, 일 안 하면 안 돼’ 막 화를 내고.---” (필리핀에서 온 E씨, 2008년 입국)

더욱이 남녀의 성역할 유형은 문화적 기대치가 다양한 만큼 모든 국가에서 획일적이지 않으며, 가족의 삶 또한 유연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제결혼 부부들은 통상적인 역할갈등을 넘어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기인하는 갈등과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녀의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부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국인 부부에 비해 쉽게 위기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서로의 기대 차이를 수용하면서 상호 조율해 가는 지혜와 노력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박경동, 2007). 하지만,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부터 서로 다른 기대로 상대방을 이상화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요컨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주자 여성들은 한국여성에 비해 병든 시부모 수발과 무뚝뚝한 남편 내조와 자녀양육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이상화된 기대는 오히려 이들의 가족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여성들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한국사회의 적응조차 수년이 걸려야 하는 외국여성들에게 하루 빨리 남편과 시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출발부터 이러한 기대를 당연시한 남성들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이러한 과정을 빨리 빨리 수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부부의 원만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쉽없는 조율의 과정이 요구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적인 지위상승의 욕구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결혼이민자 여성들 또한 소비주의적 물질성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그러한 장기간의 적응과 조율의 과정을 견디는 것은 녹록지 않다.

마. 기타 요인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 가족이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 요인은 매우 많다. 예컨대 낯선 사회에서 새로운 적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자생력이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나 시댁으로부터 상당한 간섭과 강제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 국제결혼자들의 높은 이혼율과 가출 등은 이러한 강압적인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고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큰 한국남성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배우자가 하루 빨리 한국에 적응하기를 바라면서도 기실 그들의 적응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만 충실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결혼이주자 여성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생활에 노출되고 몸소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인이나 동일국가 출신의 모임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집안에서만 생활을 강요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다(박경동, 2007). 이같은 고립상황은 결과적으로 이주여성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또한 이주자 여성들을 움츠리거나 상처입히기 십상이며, 여기에 더해 배우자나 시댁식구들이 자신들의 출신국가나 민족에 대한 공격적으로 발언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산출가족에 대한 강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구성의 복잡성이나 부부간의 나이 차이 또한 부부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재혼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의 경우는 연령대가 이미 40대를 넘어서고 있어 전처와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혼혈의 자녀출생을 원치 않게 되는데, 이 경우 자녀출산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와의 갈등이 예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전처와 그들 사이의 자녀문제

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와의 원만한 새 출발이 되지 못함은 본 사례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배우자와의 나이 차가 많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남성들과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물론 남성의 노후나 사망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생활의 안정감이 낮아 지기도 한다.

바.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족은 기회의 요인보다 위협 요인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요인,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요인, 결혼에 대한 기대격차 등으로 부부갈등과 더불어 심하면 혼인관계의 파국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모든 결혼이민자 가족이 부부폭력이나 결혼관계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를 위시한 모든 관계형성에 있어 적당한 긴장과 갈등은 그들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상술한 갈등요인이 국제결혼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행위자로서 다양한 위협요인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전략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구성과 더불어 끈임 없는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국제 결혼한 남녀들은 국내 결혼에 비해 합의와 이해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긴장과 갈등의 요소를 풀어가기 위한 부부간의 노력과 인내의 자원이 더욱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이는 무엇보다 서로 다르지만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은 물론,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부갈등은 쉽사리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통의 기술과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고조된 감정은 상호 비난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감정의 고조는 곧잘 폭력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결혼과 더

불어 이들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갈등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명확한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통해 국제결혼이 갖는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봉착하게 될 위기요인들을 진단하면서 스스로의 해법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이 감내하는 인내와 노력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으로 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하는 탈사회화 과정(de-socialization process)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적응과정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지원체계는 매우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친숙했던 것과의 별리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많은 격려와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동반자 역시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남성들이다. 따라서 한국남성들에 대한 배우자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생활의 긴장과 갈등은 매우 다양한 가족폭력의 양상으로 발전될 소지가 충분하다.

2. 가정폭력 피해 사례 분석

가. 피해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참여자 선정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민간 시설(쉼터)들과 협력하여, 피해여성과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상담원들이 면접을 담당하고 연구진들이 참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피해여성들이 면접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주여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을 통해 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들 사례도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소개

받아, 모두 12사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표 I-2 참조).

심층면접 결과 각 사례별로 나타난 폭력의 유형을 표시한 것이 아래 표이다.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성적 폭력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결 또는 중첩되면서 복합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

[표 Ⅲ-1] 유형별 폭력 발생과 폭력의 복합성

번호	코드	국적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기타
1	A	캄보디아		○		○	
2	B	필리핀		○	○		
3	C	중국 조선족	○	○		○	
4	D	베트남		○			
5	E	필리핀	○	○		○	○
6	F	필리핀	○	○	○		
7	G	베트남		○			
8	H	베트남		○	○		○
9	I	베트남					○
10	J	베트남		○			
11	K	몽골					
12	L	중국 조선족		○			○

가정폭력 피해사례에 대한 면접조사는 기존 연구에서도 다수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을 통해 피해 사례들을 일반화하는 것 보다는 피해의 다양한 특징과 복합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주여성의 출신 국적과 나이, 남성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 등에 따라 피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국제결혼의 변화양상이나 출입국 관련 정책, 중개업체 관련 정책 등도 가정폭력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폭력사례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갈등과 피해의 복합성을 중요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양한 폭력 사례에서 나타나는 피해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사

례를 고찰한 결과 특정 유형의 폭력이 다른 유형보다 더 ‘심하다’거나 더 ‘경미하다’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구타가 없어도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가족들의 공격적인 말이나 위협적 몸짓 등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양상은 다양한 유형의 폭력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직접적인 아내 구타가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둘째,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로 가정폭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이 다른 외국인 이민자라는 이유로 가족갈등의 양상이 보다 심화되고 주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양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재혼가족의 갈등,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 등이 결혼이민자라는 이유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없고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없기 때문에 가족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나. 심층면접 사례에 나타난 피해 유형

1) 심리적(정서적) 폭력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아내에 대한 위협, 무관심과 방치, 멸시하고 억압하는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면접에 참여한 사례 중에는 이주여성 아내를 협박을 해 낙태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폭언이 반복되는 경우, 이것이 다시 신체적인 폭력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C : 나한테 중국여자라고, 술 마시면 항상 그런 소리 해요. 중국 여자는 실컷 많다, 차 버리면 된다.

상담원 : 차 버리면 된다고요?

C : 네, 발로 차버리면 된대요. 항상 그래요, 술만 먹으면. 나보고 거지라 그러고.

F: 그러니까 힘들어 가는, 남편이 나한테 나쁜 말 쓰는 거. 예를 들어서 화나면 막 욕하고, 나도 존중 같은 거 받고 싶은데, 남편이 왜 ‘너 말고 다른 여자도 많아. 너보다 더 이쁜 여자도 많아’ 그런 거 얘기하면 얼마나...(속상한지). 그런데 말하고 싶어도 또 때릴까봐 참는 거야. 그냥 여기만(가슴속만) 쌓이는 거야.

상담원 : 이 분(F씨)은 작년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온 몸에 멍이 들어서, 여기 저기 전체 다 멍이 들은 상태에서 와서 우리가 병원 치료를 하면서 사진까지 증빙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서 여기 산부인과 다니셨어요. 여기서 아예 출산까지 하신 거죠. 둘째를.

2) 성적 폭력

성적인 폭력은 다수의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다. 남편이 아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부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으나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선에서 부부 상담을 많이 경험해본 실무자들은 한결같이 남편에 대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 : 왜 부부 관계는 사랑으로 느끼면서 같이, 뭐랄까 부부사랑 나눠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데 몸이 지쳐있고. 그런데 남자는 그냥 자기가 필요한대로, 그냥 느낌이 강간당하는 거 같아서...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솔직히 아직 정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정이 붙어야 되는데 정이 떨어져.

상담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남편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전화상담으로 자주 얘기했는데,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E :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나는 힘들어, 지금 피곤해. 다음에 하면 안될까’ 이거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해. 알아듣는 거 하고 이해하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남편도 알아듣지만 이해 안해. 이해 못해.

몇몇 여성들은 남편의 성적 폭력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기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자체가 매우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진술이 이주여성이 원하는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아직 서류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A : 더 어려웠던 건, 남편 이야기는 아직 못했어요.

상담원: 남편 이야기는 아직 못했다고?

A : 네. 그거는 부부 일이니까... 아직 못했어요.

상담원: 왜 안 쓰고 싶었어요?

A : 음. 그냥....

3) 신체적 폭력

많은 면접 참여자들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알콜 중독이 많았고, 술이 깬 다음에는 용서를 빌다가 다시 술을 마신 후 폭력을 되풀이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많았다. 조선족 출신인 C씨의 경우, 자신과 남편이 모두 재혼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전혀 소생의 딸도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상태였고 같이 사는 아들도 아버지를 피하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군 장교 출신인 남편은 검도나 망치 등의 흉기를 집안에 늘 갖추어 놓았고, 부인이 이것을 내다 버리면 또다시 새로 들여다 놓았다고 한다.

C: 술만 먹으면 밤새 못 자게 해요. 술주정 하고, 집에 가전제품 다 부시고. 술 먹고 나면 내가 부인이라는 걸 못 느끼나 봐요. 내가 두 번 쓰러져서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손이 안 올라갔는데, 후에는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 나는 얼마 아버지한테 안맞고 살아서 그런 걸 몰랐는데... 그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때려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나오는데 신을 못 신고 뛰쳐나왔어요. 길 순경들이 다니는데 내가 막 우니까, 붙잡고 묻더라고요. 왜 그런가고...

상담원: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고 했죠?

L : 알콜중독 센터에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니까 첫째는 목을 많이 졸라요. 그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한 적도 몇 번 이거든요. 경찰이 왔다간 적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있어요.

상담원 : 남편분과 계속 살 생각은 있으신건가요?

L : 살아야죠. 아까 나이 얘기도 했지만 우선 경제 문제가 첫째잖아요. 근데 나로 말하면 집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중국에 아이들 생활비 딱딱 보내주고 하니까. 이걸로도 나는 만족을 느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갈등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아내와 결혼은 했지만 가난한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 외의 다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경우, 아내가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질문을 하면 화를 내면서 폭력이 이어지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 남편이 처음에는 잘 해줬는데 언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D : 2006년 국제결혼중개업 이거 하면서부터 사무실에 가서 집에 안온다고 하고, 그냥 술 많이 먹고, 여자 친구 있고.

상담원 : 그럼 두 분이 계속 싸우게 된 거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였어요?

D : 네.. 화내고, 진짜 무서워요.

상담원 : 처음에 손으로 때린 건가요?

D : 네. 손으로 귀 여기, 얼굴 엄청 많이 때려요.

상담원 : 맞았을 때 경찰에 신고했나요?

D : 안했어요. 제 그냥 생각에, 신고하면 사무실에 영향이 갈까봐.

C씨의 경우 남편의 극단적인 폭력 때문에 쉼터에 피해 있다가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쉼터에 세 번이나 입소한 끝에 이혼을 어렵게 결심한 상태이다. L씨나 D씨도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항해 신고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하는 직업이나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4) 경제적 폭력, 재산상의 피해

많은 이주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아내들은 생활에서 많은 불편함과 억압감을 느꼈고, 자신 스스로 돈을 벌수 있기를 원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아내에게 취업하도록 요구하고 아내의 수입을 남편이 관리하면서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도 있다. H씨의 경우 한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도 없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청소회사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

H : 한국에 와서 4-5개월 있다가 남편 따라 회사(청소회사)에 나가 일했어요.

상담원: H씨가 일해서 월급을 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H : 1년 넘게 일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루에 3-4만원 일당 이기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담원 : 그것을 남편이 전부 가지고 갔는데, 베트남에 송금해주고 생활비로 한달에 3-4만원 정도씩 받았다는 건가요?

H :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가끔이에요. 베트남에는 300만원 정도 보내줬어요.

상담원: 그래요?

H : 화났을 때 (남편은) 어떤 사람이 친정에 그렇게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냐, 베트남에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주는 사람은 자기 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 벌으면 자기를 줘야 한다고 해요.

상담원 : 남편이 잘 해준 적이 있는지요?

H : 잘해준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그렇게 벌어서 주는데 따뜻한 옷도 없고, 회사사람들이 자기들 와이프보고 옷 있으면 주라고 했어요. 속옷도 없어요.

여성이 사실상 부양자 역할을 하면서도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도 있다. 조선족 여성인 C씨는 남편이 알콜중독으로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통역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 부인이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해 놓으면 남편은 그 돈을 빼내어 술값 등으로 써버리는 일이 반복되는데, 부인은 한국 국적이 없고 남편이 악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꼼짝없이 부인은 곤경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된다.

C : 원래 집을 내가 샀어요, 와 가지고. 살던 집에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공탁을 걸어가 지고 집을 3천 몇 백만원에 샀는데, 1년 반 후에 남편이 팔아버렸어요.

상담원: C씨 이름으로 사셨나요?

C : 내 이름으로 못 사고 시동생이름으로 샀어요. 남편은 신용불량자여서. 그런데 남편

이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해서 전세를 살았어요. 두 번째 맞고 집에서 나올 때, 내가 그 전세 계약서를 갖고 나왔어요. 또 무슨 짓을 할 까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법무부에 저를 신고한 거예요. 중국여자가 재산 뺏으려 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달아났다고.. 나를 정말 못된 사람을 해 놓은 거라.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나올 때는 전세 계약서 아예 안 갖고 나왔어요. 다 가지라고. 그랬더니 그거가지고 나보고 대출 받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다고....

다. 이주자의 위치와 젠더 폭력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성인 동시에 낯선 나라에서 온 이주자라는 위치는 이중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많은 사례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한 다음에도 가족 내에서 이주여성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남편들은 내국인 아내와 외국인 아내의 의미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즉 아내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멸시하거나 또는 ‘돈을 주고 사왔으니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식의 왜곡된 태도가 나타난다. 자신이 외국인 아내와 결혼 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아내로서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태도가 나타난다.

1) 문화적 편견

아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못하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양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은 아내에게 모멸감을 주는 상투적 언사로 이어진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점은 모든 문제를 ‘모자란 아내 탓’으로 돌리는 태도다.

상담원 : 남편 분은 상담할 때 얘기는, ‘그거 살림도 못하고, 내가 일하고 돌아오면 먹을 게 없고.’ 그런데 F씨 얘기로는 남편이 돈을 안주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음식을 못한다는 거야. 쉼터에서는 정말 너무 잘하시거든요. 한국음식도 저희보다 훨씬 잘 하세요.

그밖에도 많은 면접참여 여성들이 ‘00나라 여자들은 널렸다’, ‘내가 더 젊고 예쁜 영계를 데려오겠다’는 등의 모멸적인 언사를 경험하였다고 말했다. 시

어머니도 한국인 며느리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며느리의 부족한 면만을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2) 불안정한 아내 위치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남성들은 이들이 가난한 나라의 출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아내들을 멸시하거나 경원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남성들은 다른 여자 친구를 두고, 이에 대해 아내가 추궁하면 화를 내고 폭력으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경우 아내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혼을 진행해 버린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이 이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황스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G : 나는 많이 화나. 핸드폰 메시지 많이 오고, 자기가 전화 받으면 끊어버리는데 여자 목소리인거 같구.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여자친구 없다 그러면서 싸우고.

통역자 : (보충설명) 2월 19일 이혼하러 갔다가, 이혼을 하지 않고 한 달을 더 기다려 보자고 해서 G씨가 혼자 베트남을 갔대요.

G : 갔다 오고 나서도 남편은 알 수 없는 그 여자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거 같아요.

상담원 : 남편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G : 여자친구 얘기 조금만 해도 화를 내고, 그냥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화나면 때리고, 칼도 들고.

G 씨는 평소 새벽부터 시댁의 농장을 돌보고 또 동네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 4만원씩 일당을 벌여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베트남 친정에도 송금을 하곤 하였다. 남편이 하루는 법원에 가야하니 밭일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혼 절차임을 G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이런 상태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혼 무효소송을 하고 싶다고 한다.

G : 왜냐하면 이혼을 할려면 통역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판사가 ‘당신은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베트남 말로 통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상담원 : 그래서 그게 이혼의 끝인 줄 몰랐나요?

G : (울먹이며) 네.

한국인 남편이 재혼으로 외국인 여성을 맞이한 경우, 자신의 이혼을 재혼한 이주여성 탓으로 돌리거나, 전처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지속하려하고, 외국인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많은 갈등이 빚어진다.

H : 신랑이 밤에 전 부인하고 자꾸 전화해서 맘에 안 들어요... 통화하고 나서 항상 나한테 화를 내요.

상담원: 어떤 식으로 화를 내던가요.

H : 남편이 때렸어요. 뭐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내 생각에는 나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닌데요.. (전처 소생) 자식 이야기 물어보면 여기저기 때리고, (전처 가족과) 통화가 안되어도 때리고, 한국말도 못 배우게 하고...

상담원 : 폭력을 당할 때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H: 그냥 맞기만 했어요. 크게는 아니고 살짝 까지기만 하고요. 신랑이, 한국 사람이 때리면 입원 정도 해야 때리는 것이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상담원 : 방문교육은 받아 보셨나요.

H : 알고 있었는데 하고 싶었지만 신랑이 못하게 해요. 한국말을 모르는 게 좋다고 해요.

L씨의 경우는 남편이 한국인 아내와 이혼 한 뒤 조선족 출신인 자신과 재혼하였는데, 갑자기 전처와 재결합 하겠다면서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L :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전처와 공개적으로 내왕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따졌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좀 솔직해요. 애들 엄마가 지금 다시 살아보자고 그래서 지금 전화한다고. 나로서는 충격이죠. 온지 삼 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건지. 나중에 손자 손녀 재롱이라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내가 나가 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댁에 알리니까 시댁

에서는 펄쩍 뛰는 거예요. 전처가 이혼할 때 돈 많이 받아나갔다면서...

3) 경제적 불안정 및 재산권 불인정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여성이 상속자가 되는데, 시댁 가족들이 외국인 며느리의 재산 상속을 원하지 않아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 이미 자녀가 있고 또 둘째 자녀를 임신 중인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약간의 위자료를 줄 터이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B : 남편이름으로 된 땅을 남동생(시동생) 이름으로 바꾼다고 사인 해달라고 했는데, (침터에 있고)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사인 못했어요.

상담원: 아 그랬어요.

B : 남편 보험까지 다 (내) 사인 있어야 하고, 같이 안가면 그 쪽도(시댁식구) 못 받는데요.

상담원: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보험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B : 잘 몰라요... 진짜 무서워.

상담원 : 어떤 점이 가장 무서웠어요?

B : 그쪽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안 해주면, 혼내면 되게 무섭대요.

상담원 : 특히 누가 많이 혼내요?

B : 시누. 온 식구가 힘을 다 합쳐서... 나는 혼자.

4) 공권력/제도적 차별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의 위기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출동한 경찰이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어를 잘 하는 L씨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여러 차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L : 어우, 나 진짜 화가 났어요. 경찰이 몇 번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말이 억양이 이상하니까 좀 이상하게 탁 보더니 내 말을 들을려고도 안해요. 그냥 남편한테 “또

술 드셨네요” 이런 식으로. 그니깐 처음에는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러고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 생각도 안나요. 다음에 또 남편이 때리고 목을 막 누르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 했어요. 남편이 막 폭언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래서 “들으셨죠? 경찰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방금 전에 어떻게 했겠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척도 안하고 “그럼 살기 싫으면 합의이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정폭력으로 내가 신고했는데 왜 합의이혼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졌어요.

이 여성은 다행히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찰에게 항의할 수 있었다. L씨의 경험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아내가 외국인임을 알고 사건을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사건을 가정폭력이 아닌 ‘주변 소란’ 등의 가벼운 항목으로 기록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이혼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가는 사례가 있는데, 자신이 이미 이혼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체류자격도 만기에 이르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합의이혼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이미 합치한다고 보고 통역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혼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사실상 유기 당하게 되는 셈이다.

라. 남편과 자녀 : 피해의 재생산?

한국인 남편은 한국인이자 남성의 위치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남성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처나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에 이를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상습적인 폭력 가해자들 중 다수가 알콜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어려움과 한,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분풀이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성을 단순한 폭력 가해자가 아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로 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편의 불안정한 폭력적 태도가 반복될 경우 자녀의 성격 형성이나 정서적 안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담원 : F씨의 남편분이, 저희한테 한 번 애길 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장애인 이셨대요. 어떤 장애인지는 애길 안해 주셨는데,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거예요. 어머니는 나가서 일을 많이 하시고, 그 분도 어릴 때는 장애인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그런 상처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수철이(아들: 가명)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정서를 갖고 계신 거 같진 않아요. 수철이도 아빠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엄마 아빠 싸우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수철이가 자기 아빠 안보고 싶대요.

마.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결혼생활이 원만했던 부부도 문화적 차이, 모멸감을 주는 언사, 작은 갈등이 시작되면 점차 상승하고 확대됨으로써 더 큰 폭력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초기 갈등단계에서 상담의 개입이 중요하고, 피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배우자나 가족들을 함께 상담하기 위해 쉽터와 지원센터간의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면접 과정에서 만났던 많은 실무자들은 이전보다 쉽터나 지원센터들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제도와 정책에 부정적인 의미로 ‘적응’해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화를 낼 때도 ‘상처가 날 만큼은 절대 때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상해가 입증되면 자신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법에 ‘적응’하여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폭력을 반복하는 것이다. 역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인지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원들은 ‘이주여성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정서적(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모멸감과 억압, 가족 내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동, 아내에 대한 성적 집착 혹은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유기 등 폭력의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그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주 여성의 취약한 지위, 특히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남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결혼의 지속 혹은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폭력을 감추거나 남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남편의 폭력에 직면하여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만나본 많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고향의 부모나 친지들에게 다시 돌아갈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일자리를 얻어 스스로 독립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폭력피해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이주여성들의 현실이다.

IV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1. 결혼이민자 여성이 처한 상황과 가정폭력의 위험	71
2.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74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 정책	88
4.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과정	91
5.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	109

1. 결혼이민자 여성이 처한 상황과 가정폭력의 위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취약성은 이들을 폭력의 위험에 쉽게 노출시킨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결혼동기 중 중요한 부분은, 일본여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친정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여성들은 결혼 전 친정 식구들을 위해 일정 송금을 약속 받거나 부모가 일시불을 받고 국제결혼에 보낸다(김선아 2006; 한건수 2006).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지원한 단체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는데, 경제적 동기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시는 분들이 친정 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금전적인 부분으로. 자국에 뭔가를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시는 거고, 그런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 친정을 보내준다고 하면, 그게 싸움의 발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주여성상담소).

여성들이 한국에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살자는 경제적인 동기잖아요, 다 아시다 시피. 그래서 인제 친정에 돈 부쳐주자고 하면 본인들은 돈을 벌거나 남편이 돈을 주기를 바라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남편들은, 한국여성들은 그렇게는,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이주여성상담소)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높지만, 그 기저에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도착 전에도 경제적인 것이 크지만 도착해서도 그러하다. 전반적으로 이들 여성 남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부분이 익숙해진 경우에 보이는 문제는 없나요?]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남편 분들이. 이 분들의 특성상 연령 차이가 많이 나세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좀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익숙해지고 활동하고 싶은데, 남성분들은 좀 힘이 없으시다든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이나 그런 거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고, 경제적인 그게 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죠... 또 이 분들이 오시면 직업을 갖기를 많이 원하세요. 직업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쪽에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쪽[친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마찰이 많이 빚어지구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오자마자 돈 벌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이주여성쉼터 상담원).

이들과 결혼한 남편들은 한국사회의 결혼사회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는 남성들로서 이들의 경제적 및 직업적 지위는 낮은 편이다. 전라북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19사례 중 11사례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와 함께 사는 조사대상자 남편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국제결혼을 하였다. 남편들의 이러한 처지는 부인을 동반자로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보다는, 자신감의 결여로 부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조사에 의하면 남편 가족들은 며느리가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결혼하였으며, 때가 되면 ‘도망가 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보였다(한건수 2006).

이런 이유로 농촌지역에서는 가족들이 며느리의 행동과 외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 일어난다. 남편과 남편가족들이 결혼이민자 여성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이것은 부부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폭력의 단서로 작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습득에 어려움이 많은데, 서울의 한 인권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의 필리핀 출신 국제결혼 여성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한국거주기간이 1-2년인 사람들만 아니라 4-5년된 사람들도 대화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신란희 2005). 이유는 가족들이 이들 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돕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도 통제하기 때문이었다. 이 쉼터에서 결혼이민자 필리핀 여성 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여성들은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깨우친 경우에 해당된다(신란희 2005).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 갈등을 야기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데,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갈등과 이혼 결심의 근원은 문화적 차이에

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니깐 국제결혼에 있어서 본인들이 엘리트라서 언어가 통하고 연애를 통한 그런 거 말고 주로 중계업체를 통한 국제결혼만 단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니까 언어불통이라는거 하고 세대차, 나이차가 기본적으로 딱 베이스가 깔려요... 저희 센터에 상담 오는 사람들은 나이차이가 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 그리고 가난과 한국의 주변 남성과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리구요.. 그니까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남성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 불신을 깔고서 어떤 한국 남성들, 주변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태도들, 여성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하고 그리고 직업이 가져오는 특수성들, 막노동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준비된 국제결혼·이주가 아니라 언어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떤 문화적 적응 있죠, 충격.... 언어베이스가 없는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 결혼이주를 통한 여성들인 경우 그 문화적 충격정도가 얼마일지 그게 제 관심사인데...(○○ 상담소).

이민여성들은 전혀 한국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일단은 가족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 여성의 편에서만 설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되기보다는, 이 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이해시켜야 되고, 문화를 이해시켜야 되고, 그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 되는 부분을 서로 만나서, 법률적으로 말하면 뭐야, 중재를, 대질심문을 해갖고, 오해를 첫 번째로 풀고, 그 다음 상황으로 가려면 오래 가요. 이 여성들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가면 자기 의사 결정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부르게, ‘나 이혼 할래요’ 이렇게 모두가 오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 수는 없고, 우리는 한 두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집으로] 복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분들이 바로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가족 상담들을 먼저 거치신다는 거죠?] 또 이쪽도 한국의 풍습을 알려 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여성들이 한 2-3개월 하다 보면요,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담소)

언어습득과 관련된 오해가 종종 가족갈등의 불씨가 되는데, 며느리는 한국어 모르면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1년 지나면 한국 말을 다 알아듣는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경우 며느리가 자기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고의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며느리는 한국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농촌지역의 한 여성은 가족생계가 어려워 취로사업에 나가서 일하면서 빨리 말을 배우고 적응하게 되었다고 한다(한건수 2006).

2.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에서의 가정폭력과 이혼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 우리사회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남성들이 상대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중개업자에 의해 성사된 결혼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정폭력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권침해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관련부서들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제결혼에서 가족형성을 둘러싼 부부당사자 간의 문화적, 개인적 여건의 차이는 상호존중과 이해, 의사소통을 저해하여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3월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어 및 직업 관련 교육지원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하고 있다.

2006년 5월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주관하는 부처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되었는데(차별시정위, 2006. 5. 4), 결혼이민자정책의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곳은 법무부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업무조정이 권장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대책과 관련하여 부처 간 역할 분담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1] 결혼이민자대책 관련 부처간 업무분장

정책 과제의 내용 (주관부처)		정책의 대상 집단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일반한국인
제 도 정 비	사회복지제도 (복지부)	국민과 동등한 복지혜택	-	-	-	-
	체류·시민권제도 (법무부)	안정적 체류 국적 취득 요건	-	-	-	-
	국제결혼중개 규제(복지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탈법적 결혼 중개 방지
제 도 운 영	상담과 재발방지 (복지부, 여성부)	가정폭력 상담	-	남편상담	가족상담	-
	한국어, 적응 교육 (복지부, 문화부)	한국어·사 회적응 교육	-	-	-	-
	자녀지원 (복지부, 교육부)	양육능력 교육	집단따돌림, 학교생활, 보육시설생활	-	-	-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관계부처 합동)	-	자긍심 고취 교육	결혼이민자 출신국 사회 이해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인식 개선 홍보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내부자료.

1) 결혼이민 여성 출국전 사전정보 제공사업

결혼 전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여성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과 상호이해와 교류가 중요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해당국가 여성들에게 한국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정부와 국제결혼과 관련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¹⁴⁾(보건복지가족부

14) 2008년 12월 국제결혼이민관 2인(베트남/필리핀)이 모두 철수, 귀국 하였다.

2008). 2008년 6월부터는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 배우자 사전교육

또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한국남성의 준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전국 80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¹⁵⁾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입국하기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사전교육, 결혼준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국인 배우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수자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3) 한국어 교육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낮은 편인데, 한국 도착 전에 학습정도도 낮고, 한국에 도착하여서도 한국어 학습의 여건이 어려운 여성들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2008년에 언어능력 등급별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또 초기정착자, 농촌거주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센터 접근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서 한글교육지도사를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에 파견하는 방문교육을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외에도 문화이해 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아동양육지원, 취업지원 및 멘토링 지원서비스가 있다. 2008년 3월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서 남편에 대한 교육과 가족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 남편의 가족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을 2008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지역적 이동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여 한국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디지털대학교와

15) 2008년 9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사용하였다.

2008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EBS 방송을 통해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도 한다.

4) 취업역량 강화 교육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8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개 지역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교육 및 구직·면접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학교를 위한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양성하고 있다.

5)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 남성 배우자들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 맺어진다. 결혼중개업자가 개입되었을 경우 쌍방에 대해 과장된 정보가 제공되어서 결혼이후 당사자간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된다. 국제결혼 부부는 사회문화적·경제적으로 차이가 많고 개인적 배경에서도 연령이나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쌍방에 대한 결혼중개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은 이들 결혼에 큰 문제를 제공하는데,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44%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편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결혼중개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한국남성 위주로 진행하여 혼인성사과정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이영희 2008).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및 이혼의 근거에는 국제결혼 중매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서 정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

년 12월 제정하였고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법안의 주요내용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 인권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2008년 6월에서 12월에 이르는 시기 총17회를 실시하려고 계획한다. 회당 4시간, 5대 광역시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들은 결혼중개업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가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을 중개업자의 의무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한국남성의 가정폭력 전과기록 등 범죄기록, 정신병력기록, 결혼기록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혼 이전에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가정폭력 발생 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과 피해자에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영희 2008; 전진희 2007). 정보 제공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이것을 결혼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보관하여 폭력 및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영희 2008).

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에서 ‘근거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허술한 통역 서비스 제공, 비전문적이고 남성 고객 중심적인 사후관리, 사후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의 미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령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이영희 2008; 전진희 2007).

미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규제법에 따라, 결혼관련 인터뷰 시 구두로 결혼상대자의 범죄기록 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준다. 또 결혼중개업자는 여성의 모국어로 작성된 남성의 신상정보, 범죄기록, 성적 범죄기록, 가정폭력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얻기까지 여성과의 연락을 주선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2만5천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차별시정위원회 2006).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

지만 현장에서 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결혼중개업이 대단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중매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즉 상대방의 지위, 혹은 과거의 전과 경력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다보니 결혼생활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혼전 배우자에 대한 신원 확인, 가정폭력 대처 관련 정보 제공, 배우자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하게 폭력으로 온 친구가 있어서, 결혼할 때는 중매 회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중매 회사를 할 때는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남편의 신분이 어떤지, 그 사람 현재 직위가 어떤지, 그 사람 과거에 어땠고, 이런게 전부 정보가 제공이 안되잖아요. 좋은 점만 부각되잖아요. 사실 오다 보면 현실이 아니고, 그런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 남편이 전과가 19범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 할 때까지는 모르고, 한국에 딱 와서 안 거예요. 그 여성이 그 남편을 폭행을 해서, 전치 8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온 케이스인데, 남성을 때렸다고 그것이... 베트남 여성이 좀 강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를 예를 들어서 한 대 툭 쳤다, 그런 것을 때린 거로 해서 머 이렇게(한 대 치는 시늉) 하거나. 베트남 여성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하더라구요, 딴 나라 여성보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소).

이게[국제결혼중개업] 정말 큰 사업인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에서나, 한국에 초창기는 정말 결혼 못한 사람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혼이 많잖아요. 재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인터뷰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 [사정을] 다 알아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길게 생각한다면, 2세들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아유 이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배우자 비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배우자 비자 인터뷰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과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 배우자의 전과 같은 경우 기록에 남는 것일 텐데, 배우자 비자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안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매를 할 때, 직업이 없으면 중매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줘요. 재직증명서를. 누구 이렇게 신원보증 세워서, ‘나, 여기 이렇게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쪽에서는 확인 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밝게 투명하게 된다면 [좋겠죠](○○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소)

중매업체에서 정말 책임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정보도 정확하게 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쪽 여성한테도, 당신이 뭐를 했으며, 그런 증서가 다 있을 거 아녜요. 그런 거 서로 해서. 마음에 들면 그런 걸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문화, 우리는 저쪽의 문화를 알아야만, 한국에 오면 트러블이 있어도 좀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많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저기 길거리 가다보면, 베트남 여성은 우리 60년대처럼 뭐 부모를 잘 모십니다,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실제 베트남 여성의 상황 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좀 현혹되기가 쉬운가 봐요, 남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뭐 잘못되면 다시 봐도 된다, 그런 게 써 있고, 그게 뭐 다 상품이지. 그런 게 좀 심각한 거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중개업 관리가 제일 허술한 거 같아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소).

지금 결혼 중개업자를 신청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봤을 때도, 저희가 매주 하는데, 그 하루에만 이백이십오명 상당의 중개업자가 왔는데, 그 전 주에도, 자유업으로 풀어 놓으면서, 개인이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등록을 하고 보는 사람도 많은 거 같고. 정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주여성지원센터)

그래서 눈에 띄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감금하고 말이 안 되는 인권침해 상황은 고거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 같구요. 가출과 쉼터 요청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그 중개업체가 일주일 만에 결혼이 파탄이 나서 쉼터요청을 하는데 이전에 자기가 중개업체라고 밝힌 케이스가 있어요. “난 중개업체다.” 이렇게 하면 참 분명해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종자들이긴 하지만 밝히고 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경찰 같이 가게하고 쉼터 연결까지 해주고. 근데 이제 쉼터에 연결할 때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라, 각서 써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또 다른 국제결혼한다고 중국으로 발라버리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중개업체들이 이렇게 일주일만에 저희 번호 가르켜주고 넘겨버리는 경우죠. 쉼터가 이제는 한 정부지원 받는 게 올해는 늘어났고 열한 개 되지만 작년 초 만해두 몇개 없었어요.(○○이주여성지원센터)

중개업체의 농간은 한국여성들보다 더 착하고 말 잘 듣고 거짓 허위 광고 하는 것들이 겹쳐갖고 생겼다고 생각이 들구요. 예방조치는 시작이 됐잖아요. 몽골 같은 경우 사전교육 됐고, 배우자교육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 아시겠지만 결혼을 결정할 여성이 아니라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예방교육과 의식화작업이 아시아각국에 필요한 거 같아요. (○○이주여성지원센터)

나. 법무부 정책

1)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¹⁶⁾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법무부 2008). 외국인 배우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 및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한국생활 부적응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생활정보를 지원하고,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및 법률구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는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별로 구성되는데, 간담회, 설명회,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으로 각종 정보 제공, 친목도모, 고충상담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고 한다.¹⁷⁾

16) 법무부. 2008년 8월. 내부자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실적”

17) 2008년 8월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실적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2008). 국가별 결혼이민대표자 간담회 20회, 결혼이민자참여 어울림 행사 17회, 결혼이민자 대표 214명,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운영 120명 위촉·활동, 결혼이민자 자원 봉사 운영 전국 122명 활동, '07년 찾아가는 출입국행정 설명회 15회 실시, 결혼이민자 사랑방 운영.

[표 IV-2] 법무부의 전국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현황¹⁸⁾

사무소	구분	결혼이민자 대표	자원봉사자	명예공무원	합 계
계		214명	122명	120명	452명
서울		26	32	3	57
부산		12	7	2	21
인천		10	8	9	27
수원		8	4	7	19
제주		11	11	4	26
대구		25	.	11	36
대전		18	6	14	38
여수		19	.	2	21
의정부		16	.	7	23
광주		23	10	8	41
마산		18	15	7	40
전주		7	.	3	10
춘천		14	4	17	35
청주		7	25	26	58

자료: 법무부, 2008. 내부자료.

2) 고충상담사업

2008년 8월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국인의 한국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계획”안을 작성하고 11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법무부 2008).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이 사업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충을 수집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법무부 6개 중앙부처와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¹⁹⁾ 지속적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기획 행사의 성격을 띠

18) 법무부, 2008년 8월, 내부문건.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현황”

19)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14개의 사무소별로 2일-3일간의 기간 동안

지만,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만하다.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표 IV-3]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체류자격별 고충상담 참여자 분포

지 역	합계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서 울	651	200	67	384
부 산	314	240	63	11
인 천	366	291	1	74
수 원	720	691	25	4
제 주	121	100	19	2
대 구	58	51	.	7
대 전	454	257	114	83
여 수	144	87	52	5
의정부	197	153	.	44
광 주	407	264	100	43
마 산	1,050	394	256	400
전 주	287	249	34	4
춘 천	121	111	7	3
청 주	172	149	14	9
합계	5,062	3,237(64.1%)	752(14.9%)	1,073(21.2%)

자료: 법무부, 2008. 내부자료.

2008년 8월 법무부의 재한 외국인 고충상담사업에서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체의 64.1%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고충상담 내용은 다음 표에 소개되었는데, 국적 및 출입국체류와 관련된 것이 각각 24.6%, 12.4%를 구성하고 있어서 법적 체류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고충상담이 실시되었다. 이 사업에는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6개부처에서 204명이 참여하였다. 통역요원도 배치하였는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열어드려요” 등 각부처가 외국인의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발간한 책자를 배포하였다.

[표 IV-4]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충 상담 내용

합계	출입국 체류	국적 · 귀화	가정 폭력	자녀 문제	한국어 교육	취업 알선	친척 초청	기 타
3,237건 (100%)	401 (12.4)	798 (24.6)	77 (2.4)	112 (3.4)	138 (4.3)	211 (6.5)	248 (7.6)	1,252 (38.8)

자료: 법무부, 2008. 내부자료.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한 무료법률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성결혼이민자 130(54.7%), 외국인근로자 87(36.5%), 기타 21(8.8%)로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무료 법률 상담에서 이혼과 관련된 것이 47건, 19.7%로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이민자의 고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귀화허가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녀를 출산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귀화허가 대기기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법무부 2008).

[표 IV-5] 재한외국인의 무료법률 상담 내용

합 계	소 송	이 혼	산 재	체불임금	기 타
238건 (%)	23 (9.6%)	47 (19.7%)	22 (9.2)	40 (16.8%)	106 (61.4%)

자료: 법무부, 2008. 내부자료.

3) 체류자격 유지 완화

결혼이민자 여성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들은 무기력하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남편과의 관계 및 가정폭력 위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국적법 전문을 개정하였는데,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도 국적취득을 허용하였다. 과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결혼과 동시에 제공하였던 국적취득

기회를 결혼이후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유영은 2006).

국적법의 개정으로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은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국적법 제6조2항). 이에 따라서 1998년 6월 이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여성들은 2년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기간이 되면 배우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국적출장소를 방문하여 국적을 취득을 신청한다(안현주 2006).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국적 취득 신청이전 거주기간 동안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 때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유영은 2006).

귀화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한국인 배우자와 출석하는데, 이 때 배우자 신원보증에 요구되고 배우자의 재정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김재련 2007). 결혼한 이민자 여성의 법적 신분은 남편을 통해서 보장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부부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부인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국적취득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남편이 신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안현주 2006).

이와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이귀화요건과 관련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2004년 법 개정이 있었는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사이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4.1.20]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04.1.20] (이금연 2004).

2004년 1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중 한국인 남편이 사망, 실종하였을 경우, 남편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 별거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 간이귀화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귀화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는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⁰⁾

법무부는 2005년 9월 결혼이민자 여성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하였는데,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F-5)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거주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내체류기간이 2년 경과한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적과 영주자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법무부 2008). 이러한 기간 단축에는 국적법상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의 국내 거주요건이 2년인 점이 고려되었다. 또 2005년 9월 취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취업을 허용하였다. 이전까지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했다.

2005년 9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귀책사유 없이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여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하거나 귀책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거주(F-2)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법무부 2008).

2007년 1월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완화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판결문, 진단서 등 이외에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체류를 지원하고 있다.²¹⁾ 또 같은 시점에 가출 등의 이유로 신원보증이 철회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해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재불명자로 등재하지 않고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자녀양육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20) 법무부 자료, 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체류지원 제도개선 내용”.

21)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여성단체 197개를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로 선정하였다.

로 하였다(법무부 2008). 이외에도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많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성에게 있음을 입증될 경우 여성의 체류와 취업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폭력이 많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여성이 병원 진단서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은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든, 재결합으로 끝나든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 사이 여성의 체류자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데, 실제 사건 해결에 걸리는 시간에 턱없이 모자란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도움은] 우선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걸려 있으니까, 저희가 선불리 움직이지는 못해요. [잘못하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체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갈 수 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귀책사유가 남성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지만 이 분들이 그나마 여기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입증이 안 되면 바로 가야되요. [여기에서 서류 써주시면 대부분 출입국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소)

[결혼이민자 여성] 그 친구들은 보통 [체류]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혼 소송할 때는 3개월 썩 연장이 가능해요. 이혼을 뭐 남편 귀책사유로 해서 판결문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럼 [여성의] 신원보증이 바뀌는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는 남편이 신원보증 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바뀌잖아요. 그럼 그 신원 보증은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 센터에서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뭐 그래서 자립을 했어. 그러면 신원보증 안 되면, 이혼 하면 1년씩 밖에 연장 안 해줘요. 국적이 나오는 건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데. 그 동안 문제 생기는 거 계속 지원을 해야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장을 해도 3개월 밖에 안 되고, 그걸 또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되고. 크게는 법무부가 이런 권한을 쥐고 있어서, 체류권, 이 결혼 이민 여성들에 대해

서, 특히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특별히 더, 가능하면, 전체 결혼 이민 여성들에 대해서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남성들한테 그 만큼 통제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될 못한 것이지만, 우리 쉼터에 들어 오신 여성들한테만은, 우리가 이런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3개월이 아니라, 정말 1년은, 2년은 보장을 해야 무슨 계획은 세우고, 미래를 세우고 해 갖고 갈 텐데.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지금 이혼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 중일 때는 3개월 단위로 계속 해주기는 하죠. 그런데 만약 이혼이 됐으면, 이혼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이 안 돌아가겠다, 이러면 더 이상 쉼터에 보호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네요? 미등록 그 기준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를 받거나, 양육권을 얻었다면 가능하지만,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나 그런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정 판결을 나기가... 조정은, 출입국에서는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거든요(○○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 정책

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여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전진희 2007).²²⁾ 또한 2006년 11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을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비스를 시작하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총 24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3명, 일반상담원 2명, 통역상담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부 2008). 통역상담원은 베트남, 중국 등 8개국 이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상담번호는 1577-1366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통화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

2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시행일 2007. 10. 12. 제7조의 2 (보호시설의 종류)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외국인 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4. 28]

관기관에 연계해 준다.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의 상담건수는 2006년 11월 개소이후 2008년 7월 현재 총 23,535건이며, 월 평균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 여성부, 2008. 내부자료.

[그림 IV-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기관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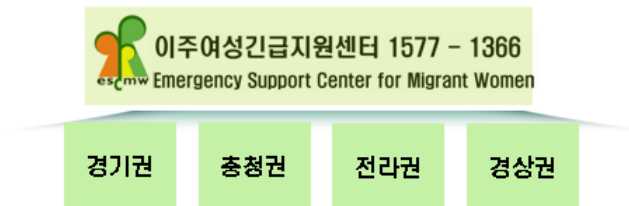
[표 IV-6]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의 상담건수 (2006.11 - 2008.6)

구분	2006.11-12	2007	2008 1-6
총 상담건수	764	13,277	7,407
월 평균 상담건수	382	1,106	1,235

자료: 여성부, 2008. 내부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차원의 상담 수요에 적절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2008년 여성부에서는 지역센터를 설치하였다(여성부 2008). 지역센터는 이주여성의 폭력피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개인 및 경찰, 병원, 보호시설, 유관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하여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관련제도 및 대처방안 상담, 피해자의 긴급지원, 경찰·병원·긴급피난처·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및 동행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성부 2008). 지역센터의 운영은 서울권, 인천·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권역별 지역센터로 이루

어져 있는데,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 전문상담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여성부 2008).



자료: 여성부. 2008. 내부자료.

[그림 IV-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역별지원센터

나.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외국인 여성전용쉼터가 인천과 천안에 설치되기 시작하고 NGO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일부에서는 통역비도 지급되고 있다(김선아 2006). 일시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이주여성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설될 예정이다(여성부 2008).²³⁾ 이중 2008년도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이주여성쉼터는 4개소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국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에서는 이전부터 이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²⁴⁾

23) 2009년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서울, 경기 각2개소, 기타 각 1개소)하여 18개소로 확대하고, 기초생활 및 법률, 의료, 출국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여성부 2008).

24) 여성부는 2009년부터 서울, 경기 등 이주여성 분포가 높은 지역에 건립규모 600 m² 내외, 30명 내외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 공동사업장, 강의실, 식당, 휴게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이주여성 자활공터를 설치·운영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거주와 함께 직업교육, 자활공간에서 취업전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여성부 2008). 이외에도 2008년부터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가정폭력 예방 등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하기 위해 국제결혼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여성부 2008).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세계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다문화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국제결혼 관련 법률 이해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나 쉼터의 설립은 초기단계에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쉼터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주여성 쉼터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기존의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쉼터의 역할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된 내국인을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가 이주여성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내국인을 위한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²⁵⁾

내국인 가정폭력 여성 쉼터와 상담소에서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별도의 지원체계라 하더라도 기존의 내국인 가정폭력 지원체계에서 구축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여성 쉼터는 장기간의 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입소하고 있다. 국내에 달리 머물 곳이 없는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쉼터는 일시적인 거처를 제공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장의 상담원들은 쉼터의 이러한 역할을,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친정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4.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과정

가. 내국인 지원기관의 결혼이민자 피해여성을 위한 역할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된 역사가 얼마 되지 않

25) 다음 자료는 2000년-2003년도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이용한 외국인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7] 광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의 내외국인 이용자 현황

연 도	계 (외국인)	성인(외국인)	아 동
2000년	4	3	1
2001년	52	35	17
2002년	76(5)	57(5)	19
2003년(1월-4월)	24(3)	16(3)	8

출처: 양철호 김영자의. 2003.

기 때문에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은 초기단계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부는 이주여성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면 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 지원체계는 부족하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는 내국인 쉼터와 달리 이주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부응하여 개인상담, 가족상담, 법적 체류자격 관련 지원,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쉼터나 상담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내국인 지원체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내국인 지원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다.

1) 내국인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을 조사하였다²⁶⁾. 조사 대상은 전국의 16개 여성긴급전화 『1366』과 쉼터이다. 내국인을 위한 『1366』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은 [표 IV-8]에 정리되어 있다. 외국인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6.4%로 나타났다. 전국1366 가운데 결혼이민자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은 경북1366 한 곳뿐인데, 경북1366은 지자체로부터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받는데, 이것을 인건비와 출장비로 지출하고 있다. 인건비는 현재 상주직원으로 활동 중인 베트남과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여성 2명의 보수로 사용되고 있다. 인천1366과 경기1366의 경우, 기관 내에 통역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봉사회나 이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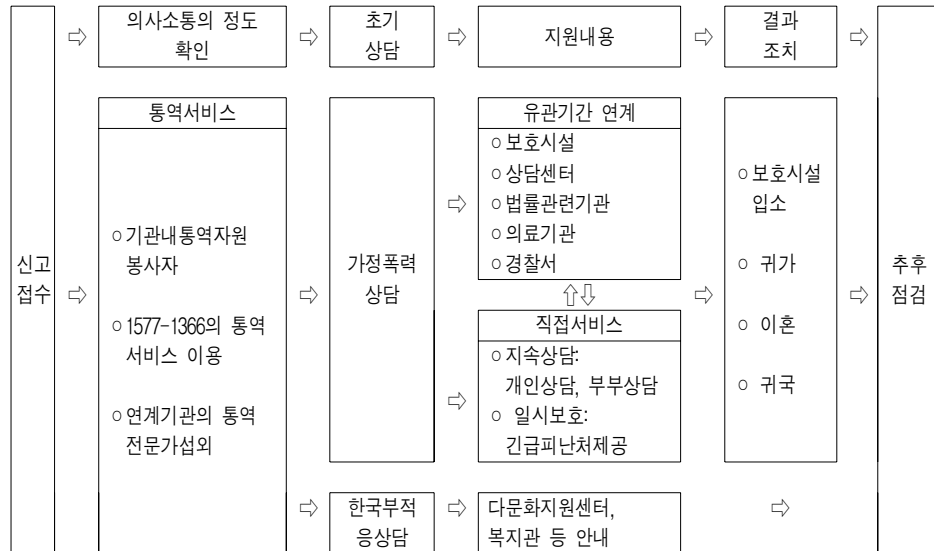
26) 2008년 12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전화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 16개 전체를, 가정폭력 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할 때마다 통역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밖에 기관들은 통역이 필요한 내담자를 위해서 1577-1366이나 경북1366에 통역을 의뢰하여 내담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있다.²⁷⁾

서울 1366의 경우 결혼이민자 상담은 전용회선을 통해서 즉시 1577-1366로 연결한다. 서울 1366을 제외한 15개의 1366은 내담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확인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상담원이 직접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기관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관 기관으로 연계한다. 그러나 내담자와 1366 상담원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내담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결정한다. 통역은 기관 자체 내에서 통역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거나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이주여성관련 기관의 통역 인력을 활용한다. 많은 경우 1577-1366을 연결하여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1577-1366과 연계하는 경우 내담자를 의뢰하기보다는 통역을 통해서 얻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1366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로 도움

27)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366은 결혼이민자 여성 내담자가 도움을 의뢰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를 통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IV-3] 여성긴급전화 『1366』의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 지원 과정

을 요청하는 확률이 높은 편인데, 내담자를 위한 지원과정은 가정폭력피해 내국인을 위한 지원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전국 1366은 모두 긴급피난처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지속 상담 지원을 받는다.

[표 IV-8] 내국인 여성긴급전화『1366』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기관명 (지자체)	상담건수(지난 6개월간) ¹⁾			통역서비스		결혼이민자관 련정부지원여 부(개소)
	외국인 상담(건)	가정폭력 상담(건)	가정폭력피해결혼 이민자상담(%)	통역 상주직원(명)	통역 자원봉사자(명)	
서울1366	201	109	54.2	0	0	X
부산1366	309	190	61.5	0	0	X
대구1366	131	79	60.3	0	0	X
인천1366	140	98	70.0	0	0	X
광주1366	331	205	61.9	0	9	X
대전1366	361	284	78.7	0	0	X
울산1366	57	45	78.9	0	4	X
경기1366	353	222	62.9	0	0	X
강원1366	282	180	63.8	0	5	X
충북1366	142	79	55.6	0	0	X
충남1366	156	120	76.9	0	2	X
전북1366	402	218	54.2	0	11	X
전남1366	491	378	77.0	0	0	X
경북1366	1,648	656	39.8	2	2	O
경남1366	383	307	80.2	0	2	X
제주1366	137	118	86.1	0	0	X
합 계	5,524	3,288	66.4%	2	35	1

주1: 2008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는 1366이 가장 많이 피해자를 연계하는 곳인데, 내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보호시설이거나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의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내담자의 경우, 보

호시설까지 동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었다. 지속상담을 원하는 내담자에게는 이주여성상담센터를 연계하며, 사안에 따라서 병원이나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의료지원,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1366은 경찰을 통해서 긴급출동을 하거나 경찰과 연계하여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일시보호하기도 한다. 일시보호 이후에는 귀가 조치를 하거나 보호시설로 안내를 한다. 내담자의 문제가 한국사회 부적응과 관련된 경우,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처럼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내용에 따라서 의뢰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내국인 쉼터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내국인 여성을 위해 설립된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⁸⁾ 외국인보호시설을 제외한 총65개의 보호시설 중 전체의 64.6%에 해당하는 42개소가 응답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결혼이민자여성 가정폭력피해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소했던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내국인 쉼터 거주 기간을 조사한 결과, ‘7일 이하’가 66명(27.6%), ‘8일 초과-1월 이하’가 86명(36.0%), ‘1월 초과-3월 이하’가 47명(19.7%), ‘3월 초과-6월 이하’가 25명(10.5%), ‘6월 초과’가 15명(6.3%)이었다. 이 중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의 경우 응답기관은 1개소이었으며, 이 기관에 지난 11개월 동안 입소했던 결혼이민자 여성은 1명으로 1년 6개월을 거주하였다. 41개의 단기보호시설 가운데 결혼이민자 여성이 입소했던 33개의 시설에서 6개월을 정확하게 채우고 퇴소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1명뿐이었고, 14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1회 3월 이내 거주연장을 신청하여 생활하였다.

28)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내국인 쉼터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8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정부지원을 받는 곳으로 제한하였다.

지난 11개월 동안(2008.1.1~11.30) 한 명 이상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입소해서 거주했던 시설은 33개소(78.6%)이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입소가 전혀 없었던 시설은 9개소(21.4%)이다. 보호시설에서 지원했던 결혼이민자 여성의 수는 총 239명이다. 조사 시점 당시 19개(45.2%)의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 1~10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거주했던 시설이 22개소(52.4%), 11~20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거주했던 시설이 9개소(21.4%), 21~30명이 거주했던 시설이 2개소(4.8%)이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입소 사례가 없다고 응답한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입소가 불가하다’고 응답하거나 ‘인근 지역에 이주 여성쉼터가 있어서 그곳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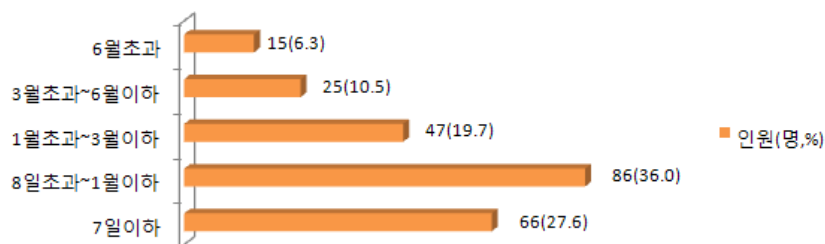
[표 IV-9]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결혼이민자 여성의 수¹⁾

(단위: 개소, %, 명)

입소인원	시설수(%)	총인원
0명	9(21.4)	239
1 ~ 10명	22(52.4)	
11 ~ 20명	9(21.4)	
21 ~ 30명	2(4.8)	
합계	42(100.0)	

주1: 지난 11개월 동안(2008.1.1~11.30)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단위: 명, %)



[그림 IV-4]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호시설 거주기간

결혼이민자 여성의 내국인 쉼터 보호시설 입소 경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지역 내에 있는 ‘상담소’, ‘경찰’, ‘다문화지원센터’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의 50%에 해당하는 21개소가 지역 내에 있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하여 의뢰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16개소(38.1%)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13개소(31.0%)가 경찰로부터, 7개소(16.7%)가 다문화지원센터 혹은 이주여성지원센터로부터 입소의뢰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기타로는 6개소(14.3%)에서 자원(재입소), 종교단체, 윈스톱지원센터, 다른 복지기관 등이 보고되었다.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로부터의 입소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표 IV-10]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입소 경로¹⁾
(단위: 개소, %)

의뢰기관	시설수(%)
여성긴급전화 1366	16(25.4)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상담소	21(33.4)
경찰	13(20.6)
다문화지원센터	7(11.1)
기타	6(9.5)
합계	63(100.0)

주1: 중복응답함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개방형질문을 사용하여 우선순위 최소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보고하게 하였는데, 응답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범주화하면 우선순위1에서 ‘의사소통(언어) 문제’가 25(59.5%)로 가장 많았다. ‘법률지원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 4(9.5%)이고 ‘문화의 생활 습관의 차이’와 ‘경제적 문제(귀국비용 마련 등)’, 그리고 ‘비해당’이 각각 3(7.1%)이고, ‘문제없음’이 2(4.8%)이고, ‘지원가능한 서비스의 한계’와 ‘이주여성의 지원거부태도’가 각각 1(2.4%)로 나타났다.

‘비해당’인 세 곳의 보호시설 중 하나는 2007년 12월 개소 이래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한 경험이 없었던 곳이고 다른 한 곳 역시 새터민은 입소하나 결

혼이민자는 입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 한 곳은 개소 6년차이나 인근에 이주여성쉼터가 있어서 결혼이민자 여성은 입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순위2에서는 ‘문화의 생활 습관의 차이’가 7(16.7%), ‘의사소통(언어) 문제’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비협조’가 각각 3(12.0%), ‘법률지원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과 ‘경제적 문제(귀국비용 마련 등)’, ‘지원가능한 서비스의 한계’, 그리고 ‘문제없음’이 각각 1(2.1%)이고, ‘비해당’이 2(4.8%)이고, ‘무응답’이 23(54.8%)로 나타났다.

내국인 쉼터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입소한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 이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는 쉼터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오해와 갈등의 증폭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언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국인들과의 공동생활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²⁹⁾을 못 해내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로 인한 부담이 같이 생활하는 한국여성들의 몫으로 돌아와 입소자들 간에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고 오해와 불신을 키워 상담원이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결혼이민자 여성도 막상 통역을 해서 확인해 보면 대화나 상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호시설 상담원의 외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호시설 생활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이혼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편이나 시댁식구를 만나서 전문용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한 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내국인 입소자 지원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에 업무가 많은데, 이것이 같은 쉼터의 내국인 피해자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결과가 낄기도 한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은 내국인 경우와 비교해 복

29) 보호시설이 공동생활시설이므로 순번에 따라 ‘밥짓기’나 ‘청소하기’ 등 일상적인 일을 담당해야 하거나 몸을 청결하게 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에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미숙하거나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잡하기 때문에 법률지원 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한다. 쉼터에서는 지원과 관련하여 신원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타지역에서 의뢰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쉼터나 상담원이 신용보증인이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여권이나 신분증의 소지에서부터 생활의 상당 부분을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숨은 여성과 그들을 숨겨주어야 하는 보호시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가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결혼이민자의 귀국지원 비용이나 한국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보호시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이혼 후 본국으로의 귀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지원하는 이혼 관련 지원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자발적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선택하여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보호시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는 상담원은 기관의 정책에 위배되는 일을 묵인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표 IV-11]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¹⁾

(단위: 명, %)

애로사항	우선순위1	우선순위2	우선순위3
문제없음	2(4.8)	1(2.4)	-
의사소통(언어) 문제	25(59.5)	3(7.1)	-
문화와 생활 습관의 차이	3(7.1)	7(16.7)	-
법률지원시 전문지식 부족	4(9.5)	1(2.4)	-
경제적인 문제(귀국비용, 자활정착비용)	3(7.1)	1(2.4)	1(2.4)
지원가능한 서비스의 한계	1(2.4)	1(2.4)	1(2.4)
남편 및 시댁 식구의 비협조	-	3(7.1)	-
결혼이민자 여성의 지원 거부 태도	1(2.4)	-	1(2.4)
비해당	3(7.1)	2(4.8)	2(4.8)
무응답	-	23(54.8)	37(88.1)
합계	42(100.0)	42(100.0)	42(100.0)

주1: 중복응답함

결혼이민자 여성을 포함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지원체계는 향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국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역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인을 위한 쉼터를 상대로 가정폭력피해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호시설에 대해서 ‘분리’와 ‘통합’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의 54.8%인 23명이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15명으로 35.7%이며, ‘절충’을 제안한 사례는 4(9.5%)였다. 분리를 찬성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이주여성쉼터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37.5%에 해당하는 9명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입소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12.5%에 해당하는 3명의 응답자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여성끼리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반면,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으므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어차피 한국에서 살려고 왔으며, 계속 살고 싶다면’ 한국 생활과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밖에 13.3%에 해당하는 2명이 ‘한국여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주여성쉼터의 개소수가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사례도 1명(6.7%) 있다.

‘절충’을 주장한 측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주여성쉼터에서 생활하는 ‘분리’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통합’하여 내국인 쉼터에서 생활해야만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최소한 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한 사람들조차 결혼이민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분리하는 것은 그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언급했다.

[표 Ⅳ-12]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의 보호시설 분리와 통합 여부

구 분	사례(%)	이 유	
		구 분	사례(%)
분리	23(54.8)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12(50.0)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입소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9(37.5)
		결혼이민자 여성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서	3(12.5)
		합계	23(100.0)
통합	15(35.7)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으므로	12(80.0)
		한국여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2(13.3)
		이주여성쉼터의 개소수가 부족하므로	1(6.7)
		합계	15(35.7)
절충	4(9.5)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분리를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통합하는 것이 장점을 살릴 수 있으므로	4(100.0)
합계	42(100.0)		

3) 내국인 상담소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례

위에서 전화조사를 통해서 내국인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 보호시설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 어느 정도로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검토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기존 문헌에서 확인된 상담소 차원의 피해자 지원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 사례에 대한 검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내국인 지원체계의 역할을 파악하고 향후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방향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2004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김해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면접상담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자 중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안현주 2006), 남편은 실직상태에 있고 19개월된 딸과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에 절망하다가 자신이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한국 거주 2년이 되어가자 출입국 관리소에서 국적취득을 하라고 연락이 왔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국적취득 신청을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부인이 국적을 취득하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결혼

이민자 여성도 자녀가 있어서 고민이지만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안현주 2006). ‘김해여성의전화’에 면접상담을 한 여성 중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고 가정폭력상담소는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고 한국사람의 편만 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안현주 2006).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는 경기도 ‘수원여성의전화’에 접수된 것으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온 중국동포 여성에 대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이영희 2008). 가정폭력 고소, 이혼재판, 오랜 학대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화된 K씨는 불합리한 한국사회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살충동을 여러 번 느꼈는데, 마을 강가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이영희 2008). 상담시 가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적취득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동안 가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비 때문에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사례를 검토해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출동하는 지구대 측에 전문통역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영희 2008).

K씨는 가정폭력으로 20여차례나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지구대에는 한 번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처음에는 당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지역을 가서 모른다고 하였다가, 사실확인에 들어가니 5명 정도가 신고를 받거나 출동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발생시 응급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서 자꾸 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니 이 여성을 쉼터같은 곳으로 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귀찮다는 듯 피해자가 이 마을을 떠났으면 하면 하는 경찰관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남편이 가출한 상태여서 남편의 가출신고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자, ‘시댁에서 남편이 있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출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요구하니 한 참 만에 마지못해 남편의 가출신고를 받아주었다. K씨는 먼저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다.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대질 심문과정에서 K씨가 발로 배를 차이고 피를 토하고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폭력을 당한 것에 비해, 남편은 K씨가 손에 들고 있던 종지로 턱을 툭툭 친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시어

머니는 실랑이 과정에, 시어머니가 K씨의 머리채를 잡자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K씨가 시어머니를 밀친 것을 맞았다고 주장하여 결국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약식재판을 하는데 판사는 K씨를 피고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과정에서 K씨의 변론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억울함을 흥분하여 호소하는 K씨의 서툰 우리말 변론이 졸립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결국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K씨는 이혼소송도 내었는데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혼판결을 받자, 너무 억울하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하였으나 무료 법률구조를 맡은 Y지역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의 부주의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원여성의전화’에 접수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이영희 2008). 결혼이민자 여성은 45세의 중국 한족여성이고 남편은 53세이다. 중국연변에서 온 여성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법적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W씨는 2003년 중국에서 남편 J씨와 결혼하여 한국에 2004년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W씨는 소개업자에게서 J씨가 착하고 성실하며 월 수입이 300만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중국에서 남편 J씨는 한국에 오면 W씨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중국에 있는 W씨의 딸을 위해 매달 돈을 부쳐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요리를 못해 선물도 하며 남편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때리고 욕을 하고 집안의 물건들로 위협을 하였다고 한다. 상담과정에서 남편J씨가 초혼인지를 물었더니 초혼이라고 했다. 상담자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아냐고 하니 그냥 중국에서 말로만 들었다고 한다.

한국에 오니 딸에게 보내주겠다던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남편의 소개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직장을 갔다 오면 여자신발과 속옷이 있어서 누구 것이냐고 물으면 남편J씨는 친구 부인 것이라고 말하며 외도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남편은 말할 때 마다 욕을 하였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인 W씨와 남편J씨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각자 생활을 하였다. 남편은 여자친구가 없어 성적으로 필요할 때만 부인을 집에 오도록 불렀고, 평소 원하는 성관계를 안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쫓아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J씨는 이시간다는 전화만을 남기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부인은 이사 간 남편을 찾다 못 찾고, 몸이 불편해 중

국으로 가서 치료 받고 돌아와, 부동산을 통해 남편의 전화번호만을 알게 되었다. 부인은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와 남편과 연락이 절실하였으나 남편은 위장결혼으로 신고 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나주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나.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 과정

앞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내국인 지원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들 관련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여성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자 지원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결혼이민자 여성이 쉼터를 찾아오는 경로, 지원 내용 및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상을 검토하려고 한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쉼터를 찾아오게 되는 경로는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체계인 1366을 통해 쉼터로 연계되기도 하며, 경찰에서 직접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들을 통해 쉼터를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쉼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요즘은 상담소나 1366이 제일 많죠. 저희들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나 여성부 홍보물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부터 저희 쉼터의 번호를 알고 오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언어가 일단 쉽게 되지 않고, 전화가 왔을 때. 아무래도 직접 하기보다는 한국말을 잘 하는 친구를 통해서, ‘제 친구가요, 쉼터에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가까운 곳에 1366이나 상담소 있어요’ [하고 알려줘서] 가서서 기초적인 상담 [하게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도 경찰에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고, ... 쉼터에 일단 오면 장기적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최소한 못해도 며칠 씩. 그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 안에서 문제가 발전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상담소를 가까운 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전혀 얘기가 안 되시는 분들, ... ‘쉼터에서 좀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아니면 걱정을 해서, ‘아 오해가 있었나보다’ 하면서, 처음부터 중재에 응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재를 봐 주고, 여성들이 쉽게 집을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1366, 상담소,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에도 1366이나 상담소에서 우선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1366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 수도 있고, 그런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런 1선에서, 저희가 2선이라고 한다면, 1선에서 충분한 상담기능을 갖추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걸려서 정말 쉼터가 필요하신 분이고, 문제 해결을 위

해서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다 생각되면 오시도록 하고 있죠(○○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거기랑 연결해서. 그 분들이 보기에야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다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연계를 해서 좀 도와주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있다가 나간 친구들이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초창기 할 때는, 저도 200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를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처한 게 뭐냐면, 우리하고 다르고, 언어가 우선 안통하고, 손발짓 해서 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초창기에는 집에 들어가는 거, 나중엔 이제 가면서는 이혼하고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아요. 그러다보니깐 여기서 우리가 피해서 심각하던 아니던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 위장결혼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다 도와주거든요. 나간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이주여성지원센터).

경찰이 아직도 부부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로만 생각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멀리서 연계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랄까, 1577-1366으로 전화를 해서 연계를 해주거나 그래야 하는데, 남편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든가... 저희 경우도 외사계 담당하고 계시는 경장님은 잘 알고계시고 지원이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 보통 여성들이 112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오잖아요. 이 지구대 분들은 동네사람들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아, 그 집 남편~’ 하면서 전화해서, 여기 누구네 원데, 여기 와 있네,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또 동네에서 그 남자분도 또 그 동네에서는 잘 알려진 경우도 있어요. 술먹고 곤조가 있다든지 해서. 자주 자주 경찰을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이것 문제로 보지 않는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비교해 이들 여성이 당면한 문제점은 집을 나왔을 때 혹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법적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남편의 신원보증요구되기 때문에 이들은 쉼터에 있는 여성들은 법적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국적취득하신 분들보다는 국적 취득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는 게, 귀책사유가 남성에게 있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기간도 길게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취득도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잡는 거구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소)

법적인 부분이에요. 법적인 부분으로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쉼터에 들어오시는 경우 귀책사유가 남편한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쉼터에] 오신다고 해도, 이혼을 해서 크게 본인이 힘든 상황이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는 살고자 해서 오신 건데, 돌아가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나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에 남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세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우에 따라서 폭력피해지원에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지원의 경우 법적 자문은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쉼터 종사자들이 결혼이민자여성에게 필요한 언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역시 내국인 가정폭력피해 서비스 지원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법률지원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재단 공감을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가지구, 하다가, 나중에는 인천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잘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권단체로 000번호사님이라고, 그 분도 잘 해주시고, 법률 구조공단에서도 생소했던 건데, 저희랑 계속 하다보니까, ...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감에서 시작해서, 지원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도와주는 분도 생기고, 인천에 생기는 분들도 홍보가 좀 되는 거 같고. 저희도 법률은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법률 공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서류 써서 소장님 보여드리고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제출하면, 거기서도 좋아해요....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해주고 싶은데, 법률구조같은 경우 통역사도 통해야 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못 가면 거기 이제 지원, 가사 단독에 있는 청원경찰 분도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옆에 있어 주시고, 이래서. 언어문제가 가장 크죠. 남편이 막 무슨 말을 했어,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인제 한글반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주여성지원센터)

[한국인 가정폭력 상담하실 때랑, [비교해] ... 폭력의 내용, 상담의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나요?] 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주로 오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한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 받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 여

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전 안 하는 날이 없고, [천안에서] 논산 뭐 어떨 때는 광주까지 가야할 때는, 차량 봉사자까지 동원을 해야 되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떨 때는 가정방문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운전, 우리 1년이면 정말 몇 키로나 갈까? ... 그러니까 각자 차가 있으니까, 쉼터 차가 나가면, 또 각자 개인 볼일은 또 보고, 차 한 대로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직접 서비스가 가게 되고. 전에는 1366에서 [일할 때]... 가정폭력피해사실확인서를 써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기는 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아버지한테 맞은 친구. 그렇게 폭력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 끊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심한 폭력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재판이혼을 신청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성을 또 관찰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남편인데 돈도 많이 들었는데, 나 고소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우리가 고소를 하고 재판이혼으로 갔을 때, [남편측] 당신들이 폭력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고, 재판상의 모든 비용은 당신들이 지불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여성이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여성이 정말 이것이 잘 마무리 되어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때는 우리가 다른 조건을 제시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하죠.... 이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폭력에 대해서 매맞을 짓은 없다. 매맞을 이유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성은 위자료 받고 비행기표 받고 해서 [고향에] 가기는 갔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에서는 쉼터를 찾아오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결혼에 수반된 비용과 체류자격, 또 이혼은 불명예라는 생각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점차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현장 쉼터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우리가 초창기 할 때만해도, 이주 여성들이 오면, 폭력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꼭 집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이 애긴 뭐냐면, 첫째는 중국 같은데서 온 친구들은 본인이 돈을 들어서 오니까,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들여야 되고. 베트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자국나라로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그래서 못 간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더라구요.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이주여성지원센터)

처음에는 이혼에 대한 욕구를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살기에는 이혼 이후에 법적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분들이 가지고 오신 폭력의 내용만 가지고는 법으로 했을 때,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거죠]. 어쨌든 지금 한국의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체류 자격의 부여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결정을 바꾸기도 하죠]. 우선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책자에 소개된 내용만 보고는, 남편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때, 내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이런 내용만 갖고 오는데, 사실 그 귀책사유 내용을 증명하기까지 필요한 그 여러 가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했던 방법에서 조금 양보를 하게 되고, 사실 오해가 매우 많고, 쌍방간 언어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는 다 알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사실 여성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불능으로 인한 오해가 큰 역할을 하는데, 쉽터는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이들의 적응을 도와 자신감을 얻고 귀가하는 여성들도 있다. 쉽터가 가족갈등 중재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초기에 이혼하고 싶어해요.... 결혼을 선택했던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아주 큰 도전이었는데, 이혼을 하는 것은, 희망을 전제로 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결정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혼을 결정한 친구들에게는, ‘그래, 이혼 후에는 이런 저런 상황들이 예상이 된다. 이 상황은 소송을 해도, 법률 구조공단에 자문을 받아도, 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여기에서 미등록으로 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거나’ 남자들은 다 보내고 싶어하시죠. 이 눈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거 자체를, [모든 문제를 보내버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내버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그나마 여성들이, ‘가난해도 내 나라가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래’[하다가 한국사회를 이해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내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먹을 만하고, 그나마 내가 해 왔던 게 너무 한 거 같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지금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법원에 가서, 조서 쓰러 가서 마음 변하신 사례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가. 결혼이민자 여성 쉼터의 방향: 전용 vs 통합

가정폭력피해 한국여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보호시설에 대해서 ‘분리’와 ‘통합’에 대한 의견은 상담소에 따라 다르다. 통합이 쉽지 않다는 의견으로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이들이 피해자로서 극복해야 할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문화권에 있는 피해자와의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음식문화,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쉼터에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할 것을 우려한다.

[향후 정부지원 쉼터가 더 늘어날 것인데요, 기존 내국인 쉼터와 관련하여 외국인 피해자 쉼터를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한국 그 쪽에 연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솔직히 쉼터에 들어 있는 친구들도 같은 문화권끼리 뭉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친구, 난 캄보디아나 그 쪽하고는 어느 정도 동남아 쪽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음식이라든지 그것도 보면은 각자 쉼터 내에서도, 각자 해결이 되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해서 먹고 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친구들은 또 각 나라마다 음식문화도 틀리구요. 그러니까 각자 해 먹다 보니까, 그런게 한국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 하나의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을 까 싶어요. 피해를 입고 여기를 들어와서 정말, 어떤 심적인 고통이 있는 친구들이 또 그 문화권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쉼터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강자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융화가 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이주여성지원센터상담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쉼터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내국인을 위한 가정폭력 관련 쉼터에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상담기능을 추가하여 이들의 쉼터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쉼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데에다 상담원을 보충한다든가, 이주상담 전문가라든가, 1366이나 그런 전문가 말구요, 직접 찾아와서, 본인들 얘기 허심탄회하게 하고, 본인이 받고자 하는 게 이거고, 저희도 처음엔 그랬지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오늘 하루 상담 해 봐서는 모르잖아요. 몇 번 만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전반적으

로 당신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소나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이주센터가 많이 없어서 힘들다고는 하는데, 기존의 것을 잘 하면서 차라리 사람들을 더 투입을 해서 [전문상담가 같은 사람]... 일단 가정폭력을 하시던 분들은 교육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교육을 하면, 정말 전문 상담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쉼터를 연계할 수 있고, 그 친구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이것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쉼터를 따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 보다는 있는 가정폭력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나, 지금 또 원하시는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이주여성 같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야만 내국인 가폭을 해보셨던 분이라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이주여성상담만 한 분 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국인 남편은, 남편은 내국인이고, 아내는 외국인이니깐 양쪽을 다 보지 않을까. (○○이주여성쉼터)

열여덟 개 까지 늘어나면, 내 생각에는 하드웨어에 들어갈 예산이 너무 낭비가 돼요. 기본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몇 개는 늘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예산을 갖고서는 있는 시설들이 더 많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초기에는 쉼터가] 저희하고 인천 밖에 없고, 몇몇 비인가 시설들은 있었지만, 뭐 순천, 목포, 광주 이런 데서 왔어요. 거기까지 지원을 가게 되면 정말 이거 가다가 죽을 지도 몰라.... 어떤 중간 광역권을, 거점권을 묶어서, 충청권에 하나 두 개, 그런데 충청남도에 하나, 북도에 하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근거리, 원거리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라권, 광주권, 경상권, 대구권, 충청권, 서울권, 이렇게 해서는 필요한데, 열여덟 개를 광역시도에 하나씩, 글썄 아직은, 지금 저희들도 입소를 의뢰하는 것을 다 받지는 못해요....[그렇지만] 열여덟 개까지가 적절한 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이주여성쉼터).

나.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

한편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있어서는 신분이 미등록된 여성들이 많다. 이들의 미등록 신분이 약점이 되어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등록된 사람을 쉼터에 입소시킬 수는 없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체류자격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의 피해가 입증되면 이들이 쉼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 혹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쉼터에 피해여성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 저는 지원을 하면서 여성부가 어쨌든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맡고 있고, 근데, 여성부 자체에서도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끔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가 많아요. 지침을 보더라도, 이주여성들이 내가 미등록이 되고 싶어서 된 친구들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가족의 방임이라든가 그걸 통제하는 속에서 미등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지침에도, 그 권익증진사업의 지침안에도, 미등록여성을 받지 마라, 미등록이 될 만한 여성을 쉼터에서 내 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록이라는 신분으로는 인가된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희들은 물론 그 여성들을 내보내지는 않죠. 어떻게든지 그 비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설사 그 비자가 없어서 우리가 시청에 이 사람을 등록된 사람으로 신청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법인에서 등록하지 예외 인원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미등록이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성이 갖는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 데 그걸 인식하지 않은 채, 미등록을 지침 안에 딱 넣어버리고 있거든요....남편이 [체류자격 신원보증] 해 주지 않아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자격에 대한 구조가. 기껏 여기와서 해 봤자, 3개월 연장 시키는 게 고작이에요. 우리 진술서 쓰고, 가정폭력으로,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혼인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면 3개월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있다 또 똑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부만은 미등록이다, 등록이다를 구분하지 말고,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체류적인 불안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쉼터라는 곳까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잣대를 댄다는 것은, ... 지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쉼터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물어요. ‘그 선생님, 비자가 없는 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받으셔야죠! (웃음) 그럼 어디로 내보낼거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해 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생계비 지원

한편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쉼터에 입소한다고 해도, 이 여성들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국적 취득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보증이 철회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국적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국적이 없다면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만 생계비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결혼이민자 여성 중 국적이 없는 여성에게는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 여성들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엔 생계비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해 왔어요.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생계권이 없어요, 이주여성들한테. 그래서 우리 큰 사회복지법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인거죠. 그 사회복지에, 국적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국적이 없다면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만 생계비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하고, 가정폭력피해시설로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따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이주여성 심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이주여성을 위한 심터 및 상담소에서는 예방 사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상담은 비중이 적어진다. 이것은 다문화 관련 사업이 정부주도형의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별도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한글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상담원화 해야 하고, 대상 이주여성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통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8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서 충분히 예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담은 열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담 기능을 좀 강화하고,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도대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뭘 하느냐, 얘기를 했어요. ... 일선의 소리를 안 듣고 정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중앙 집권적이고, 자율성 전혀 없고, 프로그램만 돌리기 바빠서 그 상담, 우리를 연결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 정말 상담 할 줄을 몰라요.... 또 한글교사 방문지도사가 상담원화 되어야 되고,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통역 서비스가 되어서, 정말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단순히 한글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까지 수용할 수 있고, 들어 줄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에서는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의 주요 기준이 내국인을 위한 시설 기준으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운영비의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 심터에 맞는 인건비 종사자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어 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업

청년 인력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에 있어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한글교육 혹은 요리교실을 열면 이 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인정하기 보다는 내국인의 가정폭력 치료회복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의 피해실태는 내국인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우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및 음식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소장님 얘기에 덧붙이자면, 권익증진사업 지침 자체가 거의가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지침을 만들라는 거죠. 이주여성 쉼터들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받는다 싶으면, 그것도 한국인 쉼터에 맞는 인건비 종사자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주여성들은 직접 서비스가 계속 제공 되고, 엄청난 인력들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걸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렇고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어디 뭐 여가부라든지 평가가 나왔을 때도, 내국인 쉼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 저희는 무조건 감점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디지? 보건사회...연구원인가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최하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인데, 요리교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주여성들한테는 요리교실 자체도 상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데 왜 치료회복에 요리교실을 넣었냐는 거예요. 그건 직업훈련으로 넣어야 되지.... ‘왜 집단 상담 같은 것을 많이 안 하나’, ‘왜 심신회복 캠프를 많이 안 하나’ ‘한글 교실이 그게 무슨 심신회복, 복권기금에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일 절실한 것은 한글이거든요. 한글이 돼야, 말이 돼야, 뭘 하지.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글 교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성부에서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17
2. 정책제언	119

1.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가족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족 해체의 위험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언어 및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보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적응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시집식구들과 남편들은 결혼이민자만큼 적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은 물론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특질과 배경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전무한 상태인 상태에서 그들 배우자의 고유한 생활습관 등을 배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상당기간 언어장벽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속마음을 쉽게 표출하기 어렵고 그들의 배우자 역시 아내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내국인 부부에 비해 대화의 부족은 물론 상호 소통과 이해의 충분한 자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갈등의 누적이나 잦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이 모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사실에 있으며, 이러한 환상은 짧은 결혼과정 동안 자신이 준비해간 목돈을 평평 쓰기도 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고 처가에 얼마의 돈을 주기도 하는 한국남성의 행동을 통해 실제 믿음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모아두었던 목돈을 과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적잖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의 높은 물가와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직면하여 한국의 경제적 풍요로움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생활에 심한 좌절이나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남성들은 결혼 직후부터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도 하기 전에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거나 역으로 남편을 부양하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녀양육문제는 매우 다양한 하위차원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사교육비와

자녀양육비용문제, 보육담당자, 자녀언어습득문제, 자녀교육, 남편과의 자녀양육태도 불일치 등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넷째, 결혼에 대한 기대차이에서 한국 남성들은 급속한 문화변동을 통해 점차 향유하기 어려운 가부장적 결혼관계를 국제결혼을 통해 획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제3세계의 여성들은 자국에서의 좌절과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거나 남녀차별적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고픈 희망으로 본국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은 국가 남성들과의 결합을 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본국남성들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한 단계 더 나은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녀의 기대격차는 때로 이들 결혼 및 부부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부부간의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요인,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요인, 결혼에 대한 기대격차 등의 요인이 심각해지면 부부갈등과 더불어 가정폭력을 유발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유형 및 실태는 내국인의 가정폭력의 유형 및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 및 기대차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국적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 경제적요인, 자녀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결혼생활이 원만했던 부부도 문화적 차이, 모델감을 주는 언사, 작은 갈등이 시작되면 점차 상승하고 확대됨으로써 더 큰 폭력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초기 갈등단계에서 상담의 개입이 중요하고, 피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배우자나 가족들을 함께 상담하기 위해 쉼터와 지원센터간의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모델감과 억압, 가족 내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동, 아내에 대한 성적 집착 혹은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유기 등 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그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주 여성의 취약한 지위, 특히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남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결혼의 지속 혹은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폭력을 감추거나 남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정책제언

결혼이민자 가족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요인,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요인, 결혼에 대한 기대격차 등의 요인이 혼인관계의 파국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모든 결혼이민자 가족이 부부폭력이나 결혼관계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감내하는 인내와 노력은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성의 가치와 규범으로 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하는 탈사회화 과정(de-socialization process)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적응과정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지원체계는 매우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친숙했던 것과의 별리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많은 격려와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동반자 역시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남성들이다. 따라서 한국남성들에 대한 배우자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많은 피해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직면하여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고향의 부모나 친지들에게 다시 돌아갈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일자리를 얻어 스스로 독립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폭력피해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이주여성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가정폭력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보호, 그리고 집행의 차원에서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첫째,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내국인들에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에게도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방문상담원, 경찰, 혹은 출입국 담당공무원 등의 관계자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부부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교육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관련 단체들에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실시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편의 가족들이 며느리를 불신하고 행동과 외출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부부간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폭력의 단서로 작용하므로 이들을 이해하고 열린 자세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 갈등을 야기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근원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지지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내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친정이나 친구 등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수시로 의논할 수 있는 사적 연결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여성은 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가 있다하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내국인 혹은 결혼이민자 여성 관계없이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더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게 되며 적응하게 되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①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이주여성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법률과 상담지원, ③ 쉼터 거주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의식, ④ 생활문화의 차이 등으로 내국인을 위한 쉼터 이용에 고충이 크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여성 전용 쉼터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다. 외국인 전용 쉼터의 필요성도 있지만 내국인을 위한 쉼터와의 연계 차원에서 이들 여성을 위한 쉼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을 위한 쉼터에 외국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 쉼터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재 가정폭력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와 상담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데, 이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다. 지구대의 경찰 출동, 상담소 및 쉼터 방문, 법적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통역서비스 제공자 풀(pool)의 개발이 요구된다.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확대

여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6년 11월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긴급지원을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비스를 시작하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통역상담원은 베트남, 중국 등 8개국 이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용상담번호는 1577-1366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통화할 수 있다.

일시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이주여성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울산, 경북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증설될 예정이다. 2008년도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이주여성쉼터는 4개소이다.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국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나 쉼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2)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 모색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연계해 준다. 이주 여성을 위해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8개국의 언어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국인과 분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보다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상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된 역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은 초기단계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부는 이주여성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면 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 지원체계는 부족하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는 내국인 쉼터와 달리 이주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부응하여 개인상담, 가족상담, 법적 체류자격 관련 지원,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

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쉼터나 상담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내국인 지원체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내국인 지원체계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통역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내국인 쉼터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입소한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 이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는 쉼터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오해와 갈등의 증폭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률지원 시 전문적인 지식의 지원이 요구된다. 쉼터에서는 지원과 관련하여 신원보장을 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타지역에서 의뢰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쉼터나 상담원이 신용보증인이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의 소지에서부터 생활의 상당 부분을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숨은 여성과 그들을 숨겨주어야 하는 보호시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가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는 쉼터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오해와 갈등의 증폭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쉼터내에서도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다.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한편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있어서는 신분이 미등록된 여성들이 많다. 이들의 미등록 신분이 약점이 되어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등록된 사람을 쉼터에 입소시킬 수는 없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체류자격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아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의 피해가 입증되면 이들이 쉼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증 혹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생계비 지원 확대

한편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쉼터에 입소한다고 해도, 이 여성들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국적 취득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보증이 철회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국적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국적이 없다면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만 생계비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결혼이민자 여성 중 국적이 없는 여성에게는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 여성들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마.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및 상담소에서는 예방 사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상담은 비중이 적어진다. 이것은 다문화 관련 사업이 정부주도형의 중앙 집권적이다 보니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별도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한글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상담원화 해야 하고, 대상 이주여성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통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는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의 주요 기준이 내국인을 위한 시설 기준으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운영비의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 쉼터에 맞는 인건비 종사자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어 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엄청난 인력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에도 있어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한글교육 혹은 요리교실을 열면 이 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인정하기 보다는 내국인의 가정폭력 치료회복을 위한 교육실시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의 피해실태는 내국인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우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및 음식문화의 이해

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바.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결혼중개업이 대단히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중매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즉 상대방의 지위, 혹은 과거의 전과 경력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다보니 결혼생활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신원 확인, 가정폭력 대처 관련 정보 제공, 배우자 교육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 차이가 많은 국제결혼에서 결혼 후 가족갈등과 폭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혼인 성사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이다. 중개업자로 하여금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및 전과기록, 건강기록 등 자세한 신상정보를 상대여성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당사자들이 갈등과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정보는 상대 여성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중개업자 및 관련 정부부처는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여성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과 폭력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해서 여성의 모국어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사. 체류자격 연장의 현실화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비교해 이들 여성이 당면한 문제점은 집을 나왔을 때 혹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법적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남편의 신원보증요구되기 때문에 쉼터에 있는 여성들은

법적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따라서 첫째, 혼인시 귀책사유가 없으면 결혼이민자의 체류를 보다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2007년 1월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과 관련된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완화시킨바 있다. 또한 가출 등의 이유로 신원보증인 철회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해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재불명자로 등재하지 않고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위해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자녀양육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을 피해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체류 자격 연장도 좀 더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든, 재결합으로 끝나든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그 사이 여성의 체류자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 해결에 걸리는 시간에 턱없이 모자란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pp.61-80.
- 강해순. 1999. “중·한 섭외혼인 생활의 실태와 전망”, 『명지대 가족생활연구학회』, 제4집, pp. 41-59.
- 광주여성의 전화. 2004. 「광주,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 상담소.
- 김민정. 2008.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정책” 전문가포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정책. 2008. 6.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pp.159~193.
- 김선아.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 (3), pp.63-106.
- 김재련. 200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민. 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에서 사용되는 ‘호칭’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외. 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 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2006년 여름호, 통권 제70호.
-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pp.97-135.
- 니이야 도시유키. 2000.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인 부인 -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민현주·안상수·황정미. 2008. “지표를 통해 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의 광주·전남지역 사례

- 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8, pp. 140-174.
-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59-70.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 실태보고」,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주최 토론회.
- 법무부. 2008. “재한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결과 보고” 11월
- 법무부. 2008.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계획(안)” 8월
- 변화순 외. 2005. 「2004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지원 법률 및 정책현황.” 『이주여성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제32회 국회인권포럼 이야기마당. 5월 21일.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소라미.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 법, 제도적 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신경희. 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pp.1-8.
- 신란희. 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 2002.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의 부부 문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집, 제2권, pp. 1-24.
- 안현정.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현주. 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옥. 2006. “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화. 2004.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실태 보고 및 토론회. (사)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자료집.

- 양순미. 2006.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철호·김영자 외.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pp.127-149
- 여성가족부. 2008, 『2007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여성부.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현황과 대책.”
- 유영은. 2006.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외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pp. 321-349.
- .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2호, pp.299-339.
- 이금연. 2004. “이주여성의노동권과 인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정책위원회.
- 이영희. 2008. “현장에서 바라본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실태와 대책.” 전문가 포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정책. 2008. 6.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윤애. 2004. 『전북 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 연구원.
- 이인경. 2007. “상담사례를 통해 본 이주여성의 삶”. 『여성연구논집』 제18집: 5-22.
- 이해웅. 2005.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 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 논집』 제22집, 제2호. pp. 107-143.
- 이현옥. 2004.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social support: 부여, 청양,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 2000. “‘한국 취업’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pp. 73- 106.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진희. 2007. “국제인권법상 이주여성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외. 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희진. 2003.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한국여성인권운동사2: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 정희진 엮음, 한울 아카데미.
- 차별시정위원회. 2006.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방안: 차별시정위 보고자료.”
- 최금해. 2005.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에 관한 연구: 여성주의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4(1): 329-364.
- _____.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 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Vol.72. No.1, pp.143-188.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과 적응.” 한국문화인류학(39(1), pp.195-243.
- 한국염. 2008.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전문가포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정책. 2008. 6.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실태조사결과」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황정미·이미정·윤덕경. 200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종합대책 연구.” 여성전략센터보고서. 미간행.
- Abelmann, N. and Hyunhee Kim, 2005, 'A Failed Attempt at Transnational Marriage: Maternal Citizenship in a Globalizing South Korea', in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onstable, Nicole, 2005, "Introductio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ed Mobility, and Global Hypergamy", in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Freeman, Caren, 2005, 'Marrying Up and Marrying Down: The Paradoxes of Marital Mobility for *Chosonjok* Brides in South Korea', in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sia, Hshao-Chuan, 2007, 'Beyond Victimization: The Empowerment of

- Marriage Migrants in Resisting Globaliz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 Issues and Prospects",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yun-Mee, 2007, 'The State and Migrant Women: Diverging Hope in the Making of "Multi Cultural Families" in Contemporary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Production and Challenges of Feminisms in The Global Era",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en's University (1-2 November 2007).
- Nakamatsu, Tomoko, 2003, 'International Marriage through Introduction Agencies: Social and Legal Realities of "Asian" Wives of Japanese Men', in Piper, N. & Mina Roces edited.,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Piper, Nicola 2006, 'Gendering the Politics of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Spring 2006, vol. 40, no. 1133-164.
- Piper, Nicola and Roces, 2003,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Piper, N. & Mina Roces edited.,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Piper, Nicola, 2003, 'Feminization of Labor Migration as Violence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vol. 9, no. 6, June 2003 723~745.
- Piper, Nicola, 2007, 'Rethinking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from a Gender Perspective : insights from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Production and Challenges of Feminisms in The Global Era",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en's University (1-2 November 2007).
- Sassen, Saskia, 2000, Women's Burden: Counter-geographies of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2: 503~524.
- Suzuki, Nobue, 2005, 'Tripartite Desires: Filipina-Japanese Marriages and Fantisied of Transnational Traversal', in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ang, Hong-zen, 2007, 'Hidden Spaces of Resistance of the Subordinated: Case Studies from Vietnamese Female Migrant Partners in Taiwa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41 No.3.



부 록

부록 1.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법	135
부록 2. 조사 질문지	156

부록 1.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법

1. 국적법[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9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국적)을 취득한다.[전문개정 2008.3.14]

1.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전문개정 2008.3.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수반)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준용)한다.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제일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수리)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①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전문개정 2008.3.14]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14]

-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전문개정 2008.3.14]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제7499호,2005.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정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 (난민의 처우) 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8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부칙 <제8442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6호]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

	<p>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13]</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13]</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p>③ 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p>
--	---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제26조 삭제<1996.12.12>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 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937호,2008.3.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록 2. 조사 질문지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질문지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조사 결혼이민자 여성 심층면접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정과제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안 귀 기관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상담과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면접질문지는 심층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담자께서 반드시 일독하시고, 피해여성에게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은 미리 심층면접질문지에 기입하시거나 확인하여 주십시오. 피해자와의 심층 면접에서 심층면접 질문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무리해서 질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조사의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여연구진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02-3156-7140)

김혜영 연구위원 (02-3156-7139)

이미정 연구위원 (02-3156-7154)

황정미 연구위원 (02-3156-7186/ 016-230-2586)

이선형 위촉연구위원 (02-3156-7203/ 010-2216-9476)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 (우편번호 122-707)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심층 면접 조사

전체 심층 면접 조사 항목

1. 내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확인한다. 상담원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질문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는 확인하여 명시한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위치와 법적 신분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2.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한국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지 등의 질문과 더불어 원 가족들은 그녀의 이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3. 성장 환경

한국에 입국하기 전, 성장환경은 어떠했나. 혹시 자라면서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4. 결혼과 가족관계

결혼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내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남성중심적인 가족 문화 혹은 성역할에 대해서 본국과 한국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

시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나?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어

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나?

5. 경제적 생활

현재 가족에서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본국과 한국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생각하는 가정폭력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가?

이들이 가정폭력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다면 무엇인가?

7. 지역사회 활동

현재 면접대상자인 이주여성이 지역 사회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

이웃과의 관계, 같은 국가 출신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등은 어떠한가?

전체 심층 면접 조사 세부 질문**1. 내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1) 내담자와 남편의 출생 연도: 내담자()년, 남편 ()년
- 2) 내담자의 결혼 전 국적?
- 3)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나요? 했다면 언제 취득하였나요?
- 4)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앞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나요?
- 5)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본인 소유 휴대폰이 있나요?
- 6)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광역시, 도/ 도시, 농촌)
- 7) 현재 누구와 어떤 유형의 집에 살고 있나요?
(예를 들어, 시부모와 전셋집) -가족형태와 자가소유현황은 구체적으로 기록.
- 8)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성별, 연령 등
- 9)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남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 10) 본인과 남편의 학력, 그리고 종교는 무엇인가요?

2.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 1) 한국에 처음 온 것은 언제인가요?
- 2) 남편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3) 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려고 결심하였나요?

3. 성장 환경

- 1) 본국의 부모님과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부모님의 직업, 형제·자매 관계 등)
- 2) 남편의 성장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3) 자라면서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4. 결혼과 가족관계

- 1) 지금까지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아오시면서, 본국의 가족생활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등.
- 2) 지금 부부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3) 부부싸움은 주로 무엇 때문에 하게 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 4) 부부간의 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나요?
- 5) 남편이 본인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6) 본인이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7)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8) 시부모와의 갈등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 9) 시부모는 본인에게 무엇을 바란다고 생각하나요?
- 10) 본인은 시부모에게 무엇을 바라나요?
- 11)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예를 들어, 시숙, 시누이 등.
- 12) 임신과 출산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 13) 현재 자녀는 몇 명인가요? 만약 재혼인 경우라면 전처가 낳은 자녀는 몇 명이며, 이들과의 관계나 문제는 없나요?

5. 경제적 생활

- 1) 현재 하고 계신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구하셨나요?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 2) 가족의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월급은 어떻게 관리하며, 생활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경제적인 면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 3)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 1) 다음에 열거된 행동 중 부부폭력으로 생각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년 이전에도 이런 행동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	부부폭력 인식	지난 1년간	1년 이전
	예/아니오 모름	(횟수)	있다/없다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고 위협을 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칼)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원치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2) 남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3) 폭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처음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뒤에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언제 처음으로 기관에 남편의 폭력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요?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기관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전문적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지요?
- 4) 혹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이미 이혼을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7. 지역사회 활동

- 1) 결혼 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NGO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2) 현재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 받는지.
- 3)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8. 기타

- 1) 만일 본국의 친구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겠다면 적극 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 만류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국제결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2.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조사 질문지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정과제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안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해 본 연구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의견을 갖고 계신 상담원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분량에 상관없이 평소 현장경험을 통해 귀하의 견해나 생각을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부디 바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여연구진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02-3156-7140)

김혜영 연구위원 (02-3156-7139)

이미정 연구위원 (02-3156-7154)

황정미 연구위원 (02-3156-7186/ 016-230-2586)

이선형 위촉연구위원 (02-3156-7203/ 010-2216-9476)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 (우편번호 122-707)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조사 질문지

1.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

- 1)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2) 지금까지 상담을 해 오시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3) 최근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부 상호 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등장하나요? 만일 있다면 이런 사례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상담 과정에서 가족원과 마찰을 빚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은 없었습니까?
- 5)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의 주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방조치에는 무엇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자원은 무엇이며,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7)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현황은 어떠한가요? 처벌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 결혼이민자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운영 현황

<접근성과 초기 접촉>

- 1) 결혼이민자 여성이 귀 기관에 도움을 청하기까지의 경로는 어떠한가요? 아래의 예시를 보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직접 찾아온다. 직접 전화로 연락한다.
 - 주위 이웃이나 친구 등이 연락한다.
 - 경찰, 병원 등 피해자와 관련된 기관에서 연락한다.
- 2) 피해 여성이 귀 기관을 접촉하기까지 그리고 귀 기관과의 접촉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예를 포함하여 문제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언어 소통
 - 남편 및 시댁에 대한 두려움
 - 체류 자격에 대한 두려움
- 3) 귀 기관과 접촉한 여성들 중 어떤 여성은 도움 요청을 중단하고 어떤 여성은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떤 경우에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게 되나요?

- 4) 초기 접촉 단계에서 피해 여성과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은 없나요? 언어 소통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 다른 가족원들의 방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비롯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지원 내용>

- 5) 현재 귀 기관에 결혼이민자 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6) 결혼이민자 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관련된 귀 기관의 원칙,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응답을 대신해주셔도 좋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

- 7)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지원하셨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었습니다가? 이 경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8) 정서적 및 경제적 폭력 등 일상적 생활은 유지하지만 이들 여성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들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9) 다른 결혼이민자 지원 기관을 비롯하여, 경찰, 병원, 보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3.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종사자 업무와 전문성 향상

- 1) 결혼이민자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충분한가요? 부족하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한가요?
- 2) 귀 기관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일은 무엇입니까? 귀하께서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3) 현재 하고 계신 일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며, 도움이 되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아래 예를 참고하시어,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단기 강좌 및 워크샵 참가,
 - NGO에서 주최하는 단기 강좌 및 워크샵 참가,
 -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 이수
 - 컴퓨터 내부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샵 참가 등
- 4) 이 외에 현재 하고 계신일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제도 및 개선 방안

- 1)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을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 2) 향후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주여성전용 폭력 피해 쉼터 및 상담 서비스 기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가정폭력 상담소에 결혼이민자 폭력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현재 귀 기관의 운영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 건물·시설비(시설 개·보수 포함), 사업비 혹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없었습니까?
- 4)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바라는 개선사항은 무엇입니까?

5. 자료분류용 질문

- 1) 귀 기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업무는 언제 처음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 2) 귀하께서는 일하고 계신 기관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개월
- 3) 결혼이민자 여성 상담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 4) 성별: 남성(), 여성()
- 5) 출생연도: ()년

심층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내국인 보호시설 전화조사 질문지

ID	
지역-기관명	
응답자(직위)	

1. 올 한해(2008. 1. 1 ~ 11. 30)간,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입소가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몇 명이었습니까?

올 한해: 2008. 1. 1 ~ 11. 30	현재: 2008. 12. 8 ~ 12. 12	
	계속 거주하는 자	12월에 새로 입소한 자
명	명	명

2. 입소자들의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입소자가 3명인 경우, "1-4일, 2-21일, 3-37일"로 기록함)

3. 어느 기관을 통해서 입소되었습니까?

1366	1577-1366	상담소	경찰	기타

4.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5.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분리 혹은 통합 가운데 어느 쪽이 결혼이민자 여성 대상의 보호시설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 분리란, 이주여성전용쉼터를 이용하는 것과 통합이란 기존의 내국인 쉼터에서 이주여성이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함)

분리	통합	기타

Abstract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Immigrants and Support Enhancements

Wha-soon Byun
Mi-jeong Lee
Hye-young Kim
Jung-Mee Hwang
Sun-Hyoung Lee

Targeting marriage immigrants, in this report, we try to identify the reasons for marital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 and to devise plans to enhance a required support system through reviewing existing data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help from experts in victim shelters that have practically supported marriage immigrants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ir vulnerable positions in the family have easily led marital conflicts to violent incidents. Family conflic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language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have frequently caused women immigrants to experience lack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that can bring

about the accumulation of conflicts and emotional explosions. Second, considering that Korea is economically richer than their native countries, differences between their expectations and realities have also given rise to family conflicts. Third, child care issues were observed to have functioned as one of the main sources of family conflicts. Fourth, differences in expect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have also worked as another cause of tensions and conflicts in their marital relations. Such family conflicts were shown to have frequently led to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 women immigrants have experienced some what different type of domestic violence than native Korean women. It stemmed from differences in nationality, culture, economic elements, and child-rearing methods.

Domestic violence that marriage immigrants have suffered from can be described as below: First, it has been witnessed in diverse and complicated types. Second, it has taken the forms of psychological, physical, sexual, economic, and cultural abuse. Cultural insults, disregard against foreign culture, husbands' excessive sexual desire, indifference, and negligence can be cited as more specific examples. It is noteworthy that all of the elements related to the vulnerability of the women in social status. In particular, their instability in legal residence has provided absolute power to their husbands and thereby, is highly likely to force them to maintain miserable relationships in order to meet legal residence requirements. Against this backdrop, flexible policy cooperation in prevention, protection, and implement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stop the women from falling victim to such demeanors.

The following plans can be presented in order to improve Korea's

current support system for the women. First, reform in socio-cultural attitude is required.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such families, appropriate training should be urgently offered to home-visit counselors and related officials in the police or immigration office. Second, a psychological assistance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the women. Thi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where native Korean women and immigrants can maintain friendly ties. System enhancements by government ministry are also required to help the women benefit from more effective services.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to make further effort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to both parties before they get married. Korean language training and employment assistance should also be provided, because they can effectively aid the women in setting up human networks and expanding their rights, and thereby play a pivotal role in controlling domestic violence.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Ministry of Justice can take speedy measures to ensure the legal residence of the immigrants in case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divorces. However, it also needs to implement more efficient schemes to help the victims be aware and make the best thereof, ensuring immigrant women sufficient time to resolve domestic violence issues by extending the legal residence period more realistic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should further expand its domestic violence victim shelters for the marriage immigrants. In addition, more concerted endeavor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sure marriage immigrants' basic rights by providing interpretation services for free, one of the indispensable elements in the support for women.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 4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2008년 12월 29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73-1 93330

<정가 10,500 원>